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성평등 보도의 개념화와 실천

- 현장 기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류 란

# 성평등 보도의 개념화와 실천

- 현장 기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수 아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류 란

류 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_\_\_\_\_ 배 은 경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최 이 숙 \_\_\_\_\_ (인)

위 원 \_\_\_\_\_ 김 수 아 \_\_\_\_\_ (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 본격화한 ‘성평등 보도’가 그 익숙한 명칭에 비해 현장 기자들 사이에선 정확한 개념이 공유되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실천의 방법론을 찾기 위해 따져보아야 할 개념들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하지 않았던 것이 지속적으로 소통의 오류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젠더 보도에서 ‘객관성(objectivity)’의 이름으로 이야기되어진 것들이 여성의 입장과 경험을 배제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꾸려는 흐름이 일부 여성기자들 사이에서 시작됐다. 본 논문은 국내 성평등 저널리즘의 일종의 개척자(pioneer)들로 볼 수 있는 이들 기자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성평등 보도의 현실과 과제를 밝혔다.

성평등 보도에 주력하고 있는 기자들은 성평등 보도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그것의 실천이 ‘소수자’와 ‘약자’ 권리 옹호의 일환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투 운동 이후에도 기자들에게 ‘성폭력 보도’는 여전히 성평등 저널리즘 실천에 있어 논쟁적인 장(場)으로 위치했다.

성평등 보도는 형식적 객관주의가 내세우는 원칙과 일상적으로 충돌하고 있었으며, ‘객관성’을 어느 쪽의 입장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불편부당(impartiality)’의 의미로 해석하는 뉴스룸의 관행은 젠더 전담 인력들로 하여금 비전문적이라는 의심을 받게 하는 현실로 이어졌다. 형식적 객관주의와 그것을 경계하려는 페미니즘 저널리즘의 윤리 간의 충돌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일부 기자들은 스스로 형식적 객관주의의 대안이 될 만한 방법들은 찾는 모습도 관찰됐다.

젠더 이슈에 주목하는 기자들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서 반페미

니즘 정서 구조와 관련해서도 도전받고 있었다. 사명감을 갖고 성평등 보도 실천에 노력하는 기자 개인들은 대중의 온라인 공격과 같은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기 십상인데, 동시에 자신의 기사가 학계와 페미니스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일부 언론사들이 운영 중인 젠더데스크 제도는 기자 개인의 커리어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상태였다. 뉴스룸 내 ‘여성 보직자 수 증대’라는 원칙의 실현이 실제 어떻게 보도의 다양성과 성평등 저널리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진행 중이다.

‘성평등’ 같은 가치 지향적 개념이자 선언의 구호로 사용되어 오던 용어를 구체적인 실천의 목표로 전환하기 위해선 공론화가 수반돼야 한다. 그것이 저널리즘 영역에서 취재와 기사 작성 등의 실무를 통해 구현돼야 하기에 더욱더 다양한 층위의 고민과 상황을 반영한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성평등 보도, 객관주의 관행, 젠더, 페미니즘, 미디어, 젠더데스크

학 번 : 2021-27757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질문 .....	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4
1. 젠더 이슈 보도의 실태와 쟁점 .....	4
2. 언론 산업과 조직문화 차원의 문제제기 .....	6
제 3 절 이론적 배경 .....	8
1. 성평등과 성평등 보도의 개념 .....	8
2. 저널리즘의 객관주의 윤리와 페미니스트 윤리의 경합 ·	10
제 4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	12
1. 연구 대상 .....	12
2. 연구 방법 .....	14
제 2 장 한국기자들이 인식하는 성평등 보도의 개념과 쟁점 .....	16
제 1 절 기자들의 성평등 보도에 대한 인식과 쟁점 .....	17
1. 미투 이후 개인의 ‘각성’ 과 성평등 보도에의 요구 ·	17
2. 젠더 개념의 상이한 해석과 접근 .....	22
3. 성평등 보도의 의미 구성과 쟁점 .....	27
4. 소수자, 약자의 권리 옹호로서 성평등 저널리즘 .....	30
제 2 절 객관주의 관행과 충돌하는 성평등 보도 .....	33
1. 성평등 보도의 핵심 전장으로서 성폭력 보도 .....	33
2. 기계적 균형으로서 객관주의 관행과 성평등의 충돌 .....	39
3.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객관주의 재구성-현장 기자의 전략	43

제 3 장 성평등 보도 실천과 현실적 한계 .....	47
제 1 절 페미니즘 대중화와 기자의 위치성 .....	47
1. ‘담론적 페미니즘’ 부재 속 2030 페미니스트들 .....	47
2. 필수 조건이 아닌 기자의 페미니스트 정체화 .....	51
제 2 절 조직 내 성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상상 .....	54
1. ‘기울기’ 은유, 차별과 이항대립 구도로서 성평등 .....	54
2. 조직 내 다양성 및 균형 요구와 현실적 한계 .....	57
제 3 절 변화하는 언론 환경과 반페미니즘 정서 구조 ...	62
1.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백래시 .....	62
2. 플랫폼 다양화 시도와 지속가능성 .....	65
제 4 장 젠더데스크와 성평등 저널리즘 제도화 노력 .....	69
제 1 절 젠더 이슈 전담 조직의 운영 및 과제 .....	69
1. 다양한 형태의 젠더 전담 조직 도입 .....	69
2. 지속가능한 젠더조직 운영을 위한 노력 .....	72
제 2 절 조직 내 여성 보직자 수 증대와 다양성 확보 ...	76
제 3 절 성평등 보도 가이드라인 제작과 실천 .....	80
제 4 절 수평적 조직 운영을 위한 실험과 과제 .....	83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86
참고문헌 .....	90
Abstract .....	97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질문

대한민국 남성 청년들이 표출하는 박탈감과 분노는 누적된 세대 갈등과 젠더 관계의 급격한 변화에서 시작됐으며 이에 대한 정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경고(배은경, 2019)가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당내 내홍으로 2030 남성 표심이 이탈하자 뚜렷한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전략은 우리 사회 젠더 이슈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방증했다.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성은 사회가 보장하는 특혜에 편승해 특권을 노리는 존재로 비하됐으며, 손쉽게 혐오의 대상이 됐다. ‘할당제’ 등 차별을 교정하기 위한 개입을 ‘반칙’으로 간주하는 정서<sup>1)</sup>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여성 청년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젠더 이슈에 대한 몰이해는 맥락이 소거된 공정 논란, 능력주의 주장과 더불어 대학 진학, 취업, 직장 내 업무 분담 등 많은 영역에서 역차별 서사에 힘을 싣는 결과를 초래했다.

청년 세대가 불을 당긴 것일 뿐, 한국 사회에서 젠더 이슈는 내내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가부장제와 성차별 구조 속에서 비가시화됐던 여성들의 구체적 경험들은 2010년대 후반 들어 강남역 살인 사건, ‘미투’(#MeToo·나는 고발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경유하며 공론장으로 터져 나왔다. 젠더 갈등은 점차 진영 갈등 못지않은 중심 갈등으로 자리 잡았으며, 페미니스트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추동했다. ‘여성혐오’에 대항해 등장한 “페미니즘 리부트” (손희정, 2015) 이후 페미니즘(feminism)은 한국 사회를 설명

---

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 출마 당시 주요 공약으로 ‘여성·청년 할당제 폐지’를 내세웠다.



하는 중요한 해석 틀로 떠올랐다.

이렇듯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제기된 다양한 젠더 이슈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성긴 방식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했을 주요 담론들이 생략되면서, 관련 논의가 공전하는 모습도 종종 관찰된다. 젠더 이슈와 관련한 혼선이 가장 크게 빚어지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론이다. 미투 운동<sup>2)</sup> 이후 미디어 업계에선 ‘성평등 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기자들에게 규범과 원칙이 될 만한 자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 현상을 해석해내는 주요 틀로서 ‘성평등’ 개념이 충분히 담론화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언급된다. 미디어가 젠더 이슈를 다룰 때마다 당위로서 성평등 가치를 전제한 채 곧장 실천 방안에 주목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인 소통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가 젠더 관련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사회 전체 변화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장은미·최이숙·김세은, 2021)하지만, 현실 속 기자들은 업계의 관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성평등 보도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전히 답을 구하는 중이다. 취재와 기사 작성 과정에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되더라도 마감을 앞두고 급하게 결론지어지기 마련이며, 추후에라도 무엇이 더 나은 해결책이었을지 상상하지 않은 채 일단락되는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취재 현장과 기사 작성 과정에서 응용할 만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험들이 발화되어 공유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언급된다. 때문에 현장에서 기자들은 때때로 성평등 보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치는 고민과 딜레마 상황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 마련이다.

---

2) ‘#Me Too’ (이하 미투) 운동은 할리우드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자신의 사건을 폭로,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국내에선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뉴스 생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피해를 입은 성폭력 사건을 폭로했으며, 이는 이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유사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증언하는 기폭제가 됐다. 미투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사건이 아니며, 이전부터 여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폭로는 꾸준히 있어왔다. 국내에선 2016년 “#00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대표적이다(김수아, 2018).

그나마 일부 언론사들이 현장 기자가 느끼는 문제의식과 혼란을 조직 전반에 공유하고 가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2018년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요강’을 마련하고, 개별 언론사 역시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이나 젠더데스크 제도 등을 도입 및 운영 중이다.

하지만 언론사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모두가 탑재해야 할 기본 소양으로서 성인지감수성을 고양하려는 노력 대신 특정 개인과 부서, 보직에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성평등 보도가 우리 사회 공공의 목표로 부상했지만, 그 실천은 여전히 조직 전반의 과제가 되지 못한 채 의식 있는 기자 몇몇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보직자가 된 선배 세대 기자들에게 성평등 보도는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필요한 의미 있는 상상이 아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무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개개의 기자가 가진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보도의 방향과 논조가 결정되면서, 젠더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한 언론사 안에서도 균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연구는 미디어 업계가 성평등 보도 실천을 위해 시급하게 시작해야 할 논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단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장의 기자들이 성평등 보도를 어떻게 의미 구성하고 있으며, 어떤 경로를 거쳐 실천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 뉴스 생산 노동자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젠더와 페미니즘, (가치로서) 성평등, 성평등 저널리즘 등에 대해 묻는 작업을 진행했다. 기자들 스스로가 관련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주목한 것으로, 귀납적 방식에 의한 실증 연구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젠더 보도를 주로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성평등 보도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성평등 보도는 기존의 객관주의 저널리즘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

성평등 보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자 개인 및 언론사 조직의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1. 젠더 이슈 보도의 실태와 쟁점

본 연구는 젠더 보도를 주로 담당하는 기자들이 성평등 보도를 어떻게 의미 구성하고 있으며, 실천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물결 페미니즘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미디어가 성차별을 야기한다고 비판했으며 동시에 미디어와 젠더의 관계, 미디어상에서 젠더 불평등 이슈에 주목해 왔다. 그동안 진행돼 온 젠더와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는 ‘미디어에서 여성의 재현’과 ‘뉴스룸에서 젠더(직업, 승진, 급여의 기회 또는 성차별 같은 불평등 이슈)’ 등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살펴볼 수 있다(Steiner, 2017).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또 다른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테면, 뉴스는 여성을 과소재현(under-representation)해 더욱 소수자로 만들며 그 역할을 주변화 함으로써 가부장주의적인 현실을 정당화한다. ‘여성의 재현’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은 남성의 과잉재현과 함께 여성의 ‘상징적 소멸(symbolic annihilation)’에 주목해 왔다. 상징적 소멸은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인종, 계급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발견되며 이는 미디어의 객관주의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삭제하거나, 여성들을 비전문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그리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유선영, 2002; 김경희·강혜란, 2016).

김경희·강혜란(2016)은 지상파와 중편방송의 저녁종합뉴스에서 여성앵커가 남성앵커보다 화면에 나타나는 빈도가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TV 뉴스가 여성을 ‘양적’으로 과소재현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TV 뉴스에

나오는 기자 10명 중 여성기자는 3명밖에 안됐고, 여성 인터뷰 참여자 역시 10명 중 2.6명에 불과했다. 뉴스는 여성을 ‘질적’으로도 과소재현하고 있었다. 여성앵커는 남성앵커보다 보도 서열이 낮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뉴스를 담당했으며 정치 분야를 보도하는 여성기자의 비중은 남성기자와 비교했을 때 현격히 적었다. 연구자들은 TV 뉴스가 재현하는 여성과 남성의 틀이 지극히 담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은(2018)은 뉴스에서 여성이 과소재현되는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선 뉴스를 생산하는 노동자들, 즉 기자들이 여성 관련 뉴스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도 아이템을 취사선택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자들이 조직에서 공유하는 인식과 관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관련된 뉴스 가치는 대부분 ‘저명성’에 좌우되는데 이는 뉴스 생산이 주로 남성의 영역이었으며 남성의 관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성의 진출이 정치나 경제 등 공(公)의 영역에선 제한되어 왔으며, 뉴스를 소비하는 수용자들이 주로 남성이었던 것도 배경으로 언급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뉴스가 남성 중심적이며, 남성에 의해 남성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의 장르라고 정의되는 것과 관련 있다(Fiske, 1994).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엔 보도 분석을 통해 미디어의 프레임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관찰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홍지아(2017)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의 기사 내용분석을 통해 ‘젠더 이슈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언론의 보도형태에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사건을 정신질환자가 공용화장실이라는 위험한 공간에서 벌인 묻지 마 살인으로 조명한 반면, 진보 언론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피해 여성이 젠더화된 폭력과 여성혐오로 인해 희생된 사건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 언론사는 자사의 주장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취재원을 편의적으로 선택했으며, 칼럼과 사설을 통해 주장을 확대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이숙·장은미·김세은(2020)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재판’,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젠더갈등’ 등 3개 이슈에 대해 분석했다. 3개 신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안 전 지사의 재판 보도는 타 이슈에 비해 보도량이 많았으며 여성 기자들이 주 생산자로 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중앙일보>에 비해 사건, 그 자체가 아닌 그러한 사건이 가능하게 한 구조적 맥락에 집중한 보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가영·유세경(2020)은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발화한 김지은 씨의 미투, 그리고 관련 재판에 대한 보도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5대 일간지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폭로 초기에는 김지은 씨의 미투 발화에 과도하게 보도가 쏠리는 경향을 보였으며, ‘현재/과거-개인-책임귀인’ 프레임이 가장 자주 사용됐다. 보수적 매체들에선 ‘과거-개인-책임귀인/정황’ 보도가 주류였고, 진보적 매체들은 ‘현재/미래-사회-가치’ 프레임의 기사를 주로 보도했다.

## 2. 언론 산업과 조직문화 차원의 문제제기

국내 젠더 보도 자체의 콘텐츠 분석을 넘어 그러한 보도가 가능할 수 있게 한 배경을 탐구하려는 선행 연구들도 등장했다. 슈메이커와 리즈(1996)의 계층 모델에 따르면 미디어의 내용은 기사를 쓰는 기자의 교육 수준, 경험, 성별뿐만 아니라 언론계의 관행, 조직, 이데올로기 등 여러 층위의 요소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 생산 환경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은 젠더 이슈를 다루는 언론계 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인과 미디어 조직, 유관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미투 운동 이후엔 페미니즘의 부상이 뉴스룸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본격화했으며, 성평등한 보도를 위해 조직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모색한 연구들도 이어졌다. 서구를 중심으로 각국이 성평등 보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정책적 차원과 함께

개별 미디어 조직 차원에서 살펴보는 시도도 등장했다(김세은·홍남희, 2019; 김세은·장은미·최이숙, 2019).

스타이너(2017)는 TV에 출연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의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신체적 매력이라고 보았다. 남성은 늙고 뚱뚱하고 대머리가 되어도 방송에 계속 출연할 수 있는 반면, 여성의 매력은 협소하게 정의되며 이른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여성은 그들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쉽게 해고되거나 강등되었다. 성차별주의와 외모지상주의는 연령주의, 그리고 인종주의와 교차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유색 인종 여성에게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홍지아(2016)는 여성기자들을 대상으로 직업과 젠더의 특성이 부딪치는 갈등 상황, 그리고 이것이 뉴스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여성기자들은 낮은 젠더 감수성을 갖고 있는 일부 남성 취재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기혼 여성기자들의 경우엔 고급정보 취재를 위해선 사적 시간을 할애해야 함에도 육아의 부담 등에 쫓기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자들은 또한 언론사 조직 특유의 상명하복식 위계질서, 그리고 일상적인 성차별 문화에 노출돼 있었다.

미투 운동 이후엔 성평등한 보도를 위해 언론사가 해야 할 노력, 그리고 언론 생태계가 시도해야 할 방안들에 대한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장은미·최이숙·김세은(2021)은 페미니즘의 부상과 젠더화된 뉴스 생산에 가져온 변화와 향후 성평등한 보도를 위해 언론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했다. 미투 운동 이후 일부 언론사에서 새롭게 젠더데스크와 젠더팀을 구성했지만 조직 내 균질하지 않은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젠더 이슈는 여전히 저평가 되고 있었다. 기계적 중립과 선정주의적 보도 관행 역시 여전했다. 젠더 뉴스를 생산해 온 여성기자들은 온라인 공간의 수위 높은 폭력으로 인해 빈번히 피해에 노출됐지만, 보호책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이제는 성차별적 보도가 되지 않기 위한 조치들과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교한 고민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홍남희(2021)는 단순히 여성의 수적 증가가 젠더 평등의 실현은 아니며 어떤 자리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으며 그것의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구체적 요소와 맥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평등법 도입’ 처럼 사회 전반에 소수자 차별금지, 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화 등 공감대가 만들어질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평등의 정의 실현을 위해선 미디어와 미디어 규제 기구의 역할이 법적·문화적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 제 3 절 이론적 배경

#### 1. 성평등과 성평등 보도의 개념

‘미디어를 위한 젠더 균형 가이드’에서 멜라니 워커(Melanie Walker) 워민 인 뉴스(Women in News) 대표 겸 세계신문협회(WAN-IFRA) 미디어 개발부문 이사는 “최근 뉴스 콘텐츠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 산업 측면에서도 성평등과 다양성, 포용의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됐다”라며 “관점이나 의견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이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2021).

이처럼 미디어 업계가 젠더 균형, 성평등, 성평등 저널리즘 등의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그 의미를 정확히 규정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전제하는 성평등 보도란 복합명사로서 ‘성평등’과 ‘보도’ 각 의미를 결합해 ‘성평등 관련 이슈를 다루는 보도’, 혹은 ‘성평등 가치를 추구하는 보도’, ‘성평등한 방식으로 제작된 보도’, ‘성평등한 사회에 기여하는 보도’ 등으로 그 뜻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무엇이 성평등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진옥(2018)은 성평등이 우리 사회에선 성불평등과 성차별 등 ‘여성 문제’들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포괄적 용어로서 “대안적 가치 및 규범적

목표이자 동시에 그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실행 도구”(192쪽)라고 보았다. 이재경과 김경희(2012)은 성평등이 “다양한 차원과 많은 의미의 층위를 가진 복잡한 개념”(16쪽)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성평등은 남성 중심적이고 위계적인 사회운영 논리를 바꾸는 것이며 공사 영역으로 분리된 성역할과 자원분배 규칙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성평등의 의미는 정치적 맥락에 의해 규정되고 변화하므로 이를 둘러싼 정책공동체의 성찰과 토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라금(2008)은 성평등이 당면한 문제를 달리하는 여성들의 입장에 따른 경합적 개념이라고 보았다. 다만 이는 남성 지배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논쟁적이기에 포기돼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루어내야 할 해방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다.

그동안 미디어에서 성평등 보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약자’로 위치지어지는 여성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됐다. 즉, 성평등 저널리즘 실천의 방법으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살피고 반영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전술한 ‘상징적 소멸’ 개념을 다시 가져올 필요가 있다.

터크만과 다니엘은 상징적 소멸의 양상에 대해 미디어가 특정 집단을 전혀 등장시키지 않거나(omission) 사소하고 의미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trivialisation),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해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condemnation)으로 세분화했다. 언론에서 성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아예 전하지 않거나, 적게 다루는 것이 대표적이다(Tuchman & Daniel, 1978; 김경모, 2003 재인용). 여성들의 목소리가 스스로 공유되지 못한 채 엘리트적 타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현상도 종종 볼 수 있다. 상징적 소멸은 이렇듯 미디어에서 여성이 제대로 재현되지 않는 현상, 즉 존재감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소재에 대한 재현의 기여가 그것의 영향력 기여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2. 저널리즘의 객관주의 윤리와 페미니스트 윤리의 경합

저널리즘은 전통적으로 현실의 진실한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 정당성(legitimacy)의 상당 부분을 보장받았다. ‘진실(truth)’과 ‘현실(reality)’ 같은 개념은 객관성(objectivity)과 분리될 수 없으며, 뉴스를 전파하는 데 있어 객관성이야말로 저널리즘에 요구되는 중요한 패러다임이다(Wien, 2005). ‘무엇이 객관성을 구성하는가?’에 주목한 웨스터슈탈은 객관성을 사실성(factuality), 그리고 불편부당성(impartiality)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성은 다시 진실성(truth)과 유관성(relevance)으로, 불편부당성은 비당파성(non partisanship)과 중립성(neutral)으로 나뉜다. 사실성은 인식론적, 불편부당성은 정치적 개념으로 구분되며 진실성은 기사에 드러난 정보의 진위여부가 중요하다. 유관성은 사건의 내용,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와 관련 있으며 비당파성은 기사에 내재된 정치적 관점과 같은 문맥상의 중립성을 가리킨다. 중립성은 중립적 입장을 실천하는 절차적 방법과 관계 있다고 볼 수 있다(Westerstahl, 1983; 조연하, 2019 재인용)

저널리즘에 대한 공고한 믿음이 객관성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 연구들은 뉴스가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재구성된 현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가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수용자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현실의 구성에 관여한다고 보았다. 엔트만(Entman, 1991)은 뉴스 제작자들이 사건의 특정한 측면을 선택(selection)하고 부각(salience)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새로이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뉴스가 그것의 생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치 판단 및 선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뉴스는 특정 조직의 규범과 그들이 내면화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재구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틀린(Gitlin, 1980)은 이런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프레임(Frame)’ 개념을 적용한다. 기틀린에 따르면 미디어 프레임은 “언어적, 또는 영상적 담론을 조직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식, 해석, 제시, 선별, 강조, 배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패턴”이며, 궁극적으로

뉴스 생산자들은 미디어 프레임을 통해 현실을 해석한다.

한국 언론은 그동안 객관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하면서도, 형식적 수용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객관주의 관행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한국 언론이 특수한 역사적 조건과 문화적 환경 하에서 객관주의의 형식을 가져와 독특한 형식적 객관주의 관행을 만들어냈다는 비판이다(남재일, 2006-2008; 박대민, 2015). 형식적 객관주의에 근거한 기계적 중립은 젠더 이슈 관련 보도 영역에선 젠더 편향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김훈순, 2004; 임영숙·엄정운, 2005).

젠더 보도 영역에서 형식적 객관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한 페미니즘 저널리즘 윤리는 권력 구조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가 사건의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목소리가 기자들의 편견으로 인해 경청되지 못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teiner, 2018). 객관주의 저널리즘에 기초한 실천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침묵을 강요받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보도 윤리가 필요할 것이다(최이숙·김은진, 2019).

저널리즘의 위기는 객관성에 대한 인식론적 대안을 실험함으로써 극복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페미니즘 인식론(Feminist Standpoint Epistemology)의 창시자이자 대표적 이론가인 샌드라 하딩(Sandra Harding, 1991/2009)은 전통적 과학이 상정한 가치중립적 객관성을 비판하며 “강한 객관성(Strong objectivity)” 개념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초역사적 진실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과학적 지식은 사회적으로 위치지어진다. 여성의 삶 역시 그들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일한 토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연구는 지배집단 남성들의 삶에 기반하는 연구보다 덜 편파적이고 성찰적이며, 강력한 객관성을 갖는다. 여성들이 갖는 관점을 관찰하고, 제3세계 여성들과 레즈비언들 등 타자들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덜 왜곡된 지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강한 객관성은 편견이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약한 객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며, 연구과정에서 연구 대상 뿐 아니라 연구자의 배경적 신

념들에 대한 성찰적 관점을 갖게 하기에 전통적 과학보다 더욱 강력한 객관성을 견지한다.

객관주의의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부터의 관점(View from nowhere)’으로 요약되는 바, 가정된 객관성은 실제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담으면서 권력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게 만든다(Callison & Young, 2019). 저널리즘 스스로 선택한 주제와 메시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할 때, 단순히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객관주의로는 저널리즘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 따라서 저널리즘에는 적절한 질문을 하고, 필요한 방법을 조사하고, 인식 또는 사회적 공감을 생성하는 윤리적 실천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윤리의 기반으로 ‘돌봄과 배려’ 윤리가 제시된다. 이는 개인화된 돌봄과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공중의 관심사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가진 시민들 간의 돌봄을 의미한다(Jones, 2021).

## 제 4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젠더 이슈를 보도해 온 일선 기자들의 경험과 목소리에 기초해 미디어 업계의 성평등 보도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 구조적 진단을 내리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뉴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자 개인, 업계의 관행, 언론사 조직과 조직 외적 요소 및 사회적 담론을 분석 틀로 활용했다(Shoemaker & Reese, 1996).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인터뷰 참여자로 젠더 이슈 관련 보도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거나, 조직 내에서 젠더 전담 인력<sup>3)</sup>으로 분류된 기자들을 선정했

---

3) 젠더 전담 인력은 젠더데스크, 젠더팀에 소속된 기자들, 정기적으로 젠더 이

다. 국내 젠더 보도의 경우 사명감을 가진 일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연구 대상을 다양한 출입처와 기사 작성의 경험을 가진 일반의 기자들로 확대했을 경우 심층 인터뷰 자체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된 언론사의 구분에 따라 기자가 하는 일의 종류와 역할, 조직 문화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면/방송, 중앙 종합일간지와 지역 언론 등을 비슷한 비율로 분배했다. 결과적으로 인터뷰 참여자의 연령은 30대 초반~50대 초반이었으며,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다.

현재 국내 젠더 전담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들이 제한돼 있어 특정하기 쉬운 만큼 신원과 관련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기재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투 운동이 이뤄지던 당시에 사회부에서 근무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대다수 기자들의 인식’이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언론사 가운데 젠더 전담 제도를 도입 및 운영 중인 언론사가 소수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 부분은 일부 누락했다. 따라서 인터뷰 인용에 있어서도, 기자 개개인에게 미리 그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수적이었다.

#### <심층 인터뷰 참여자>

참여자	경력	참여자 특성
A	11년차	
B	10년차	젠더 전담 인력
C	18년차	젠더 전담 인력
D	13년차	
E	9년차	
F	8년차	젠더 전담 인력
G	9년차	
H	8년차	젠더 전담 인력
I	5년차	
J	28년차	젠더 전담 인력
K	16년차	젠더 전담 인력

---

슈를 싣는 지면(코너)을 담당하는 기자 등을 의미한다.

## 2. 연구 방법

기자들이 현장에서 기사를 쓸 때 젠더와 페미니즘, 성평등 보도의 개념을 각각 어떻게 의미구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쟁점이 떠오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depth interview)’를 진행했다. 국내에서 젠더 이슈를 취재하고 기사 작성을 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기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한 의견을 줄 수 있는 응답자를 특정해 인터뷰하는 방식을 고려했다. 인터뷰는 미리 응답자와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 진행했으며, 직접 만나거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2022년 6월~8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1회 인터뷰 시 평균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구조화된(structured)’ 질문지를 토대로 모든 응답자에게 공통의 질문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응답자가 소속된 언론사(중앙 일간지 및 지상파 방송사, 지역 언론사)의 특징에 맞춰 추가 질문을 던졌다. 젠더 전담 인력들의 경우 각 기자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를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을 진행했다. 공통 질문은 크게 세 영역의 범주로 나눠 진행됐는데, 1) 젠더와 성평등 보도 개념 2) 성평등 보도를 위한 개인적 실천 3) 성평등 보도를 위한 조직과 사회의 노력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영역	내 용
젠더와 성평등 보도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언론 보도에서 ‘젠더’와 ‘페미니즘 개념의 의미구성</li> <li>-젠더 이슈 보도 경험</li> <li>-성평등 보도 개념의 규정</li> <li>-성평등 보도를 담당하는 개인이나 부서의 존재</li> <li>-성별/여성/섹스/젠더/페미니즘의 의미적 구분</li> </ul>

<p>성평등 보도를 위한 개인적 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평등 보도를 위한 개인적 노력</li> <li>-성평등 보도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li> <li>-성평등 보도 실천을 위해 참고한 모범 사례</li> <li>-미디어 업계와 학계, 관련 기관 등의 노력 평가</li> </ul>
<p>성평등 보도를 위한 조직과 사회의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평등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존재 인지 여부와 도움을 받은 경험</li> <li>-소속 언론사의 성평등 보도를 위한 노력</li> <li>-소속 언론사의 플랫폼 다양화 노력</li> <li>-소속 언론사의 성비</li> </ul> <p>[추가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BC의 방송 출연 남녀 성비 50 대 50 목표에 대한 이해와 공감</li> <li>-성평등 보도를 주로 여성이 전담하는 것에 대한 의견</li> </ul>

## 제 2 장 한국 기자들이 인식하는 성평등 보도의 개념과 쟁점

2021년 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권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 청년 세대의 표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젊은 유권자들의 이례적인 성별 격차 투표 결과는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로서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 각각을 향한 정치권의 구애로 이어졌다.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언론들은 젊은 남녀 간 표심 분화 현상에 주목하며 그 원인으로 젠더 이슈를 지목했다. 언론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여성가족부 해체’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이 보수 성향의 2030 남성들 입맛에 맞춘 것이었으며, 젊은 여성들이 이에 반발했다고 분석했다(박준우, 2022. 3. 10).

이 과정에서 다층적이고 분석적 접근을 시도한 일부 보도(천관율, 2019. 4. 15) 등을 제외하고, ‘젠더 갈라치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기사들에 대해선 대중의 부정적 피드백이 이어졌다.<sup>4)</sup> 언론 보도가 성차별적 관행과 구조 타파를 위한 근본적 접근 대신, 젠더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권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이슈에 올라타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우리 사회 젠더 ‘대결’ 구도가 공고화하는 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론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2018년 미투 국면에서 나온 보도들의 내용을 두고 “참사에 가깝다”(송창한, 2022. 4. 18)는 평가가 쏟아진 데 이어 다시 한 번 젠더 이슈를 다루는 기자들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쇼펠레(Scheufele, 1999)는 뉴스 생산자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압력이 언론이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언론인은 내

---

4) 이대남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은 “세대 및 성별 갈라치기”에 의한 프레임이라고 인식했다. 특히 이대남 현상 관련 보도에 대해선 “용어 오·남용(78.7%)”, “피상적 보도(75.2%)”, “입맛대로 보도(77.1%)” 등 부정 평가가 지배적이었다(최승영, 2022. 3. 24).

면화된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미디어 프레임을 만들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언론인 개인의 인식을 들여다보는 일은 미디어 조직,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로 논의를 확장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공적으로 구성된 담론의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기사를 쓸 때 젠더와 페미니즘, 성평등 보도의 개념을 각각 어떻게 의미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 제 1 절 기자들의 성평등 보도에 대한 인식과 쟁점

### 1. 미투 이후 개인의 ‘각성’ 과 성평등 보도에의 요구

본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한국 언론의 성평등 보도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화의 계기로 201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터져 나온 미투 운동을 언급했다. 기자들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이 여성 혐오(misogyny)에 기반한 것이라는 인식과 쉐를 함께했으며, 뒤이어 제기된 한국 사회의 젠더 위계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동의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미투 운동이 본격화하던 시기에 입사 만 10년 차 정도의 주니어 기자로 사회부에 속해 있었으며, 관련 기사를 직접 작성하거나 동료가 취재를 하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 본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2010년대 후반 대한민국 사회에서 터져 나온 사건들 - 낙태죄 폐지와 해화역 시위 등 다양한 젠더 이슈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꿰어서 고민할 수 있는 감각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때 일어난 ‘각성’ 이 후일에 젠더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복기한다.

F 기자는 대학 시절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본 적 없었던 자신이 젠더 이슈와 성평등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것이 “시나브로 진행된 것” 이라고 인식한다. 입사 이후 지속된 직장 내 젠더 불평등을 지켜보며 “기본적으로 여기자로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차별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예민” 해 있던 차에, 본격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터져 나오는



젠더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파급력 있는 이슈가 공통적인 여성들에게도 그런 공통적인 감각을 주고, 정말 추모하는 공간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 감각은 뭘까?’라고 생각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2017, 2018년에 제가 경찰팀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안희정 사건’이나 ‘불편한 용기 시위’ 같은 젠더 관련 기사를 많이 쓰게 됐고. [중략] 선천적으로 제가 한국사회에서 여자, 여성으로 살면서 느끼게 된 그런 예민한 감각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기자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제가 이 이슈를 장악해야 하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공부한 지점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 F 기자

H 기자는 젠더 보도에 앞장서게 된 계기에 대해 “기자를 하고 나서도 계속 모르고 살”던 자신이 “급속도로 눈이 뜨이는 순간”을 갖게 됐기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인식했다. H 기자는 이러한 변화가 “약간 불편한 정도로 느꼈던 현상들이 점차 부조리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었으며, 취재를 위해 단시간에 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즉 일종의 ‘훈련’을 거치면서 후천적으로 갖게 된 감각 덕분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더니 갑자기 ‘펜스룰(Pence Rule)’이 나오는데, 그 펜스룰이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저한테는. [중략] 그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한국 사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빠르게 학습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안희정 사건에서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아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부분이 되겠구나, 뇌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했습니다. - H 기자

B 기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기사를 쓰며 수직적 구조의 사건팀 안에서 논의할 사람이 없어 난감했을 뿐 아니라 “내가 가진 객관성이라는 게 허물어지” 는 답답함을 느꼈다.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을 반반씩 신는 것, 그 이상의 실천이 필요했지만 답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스스로 젠더 이슈에 밝은 저명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하고 관련 책을 읽었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시킨 적 없는 ‘공부’ 를 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말 두 마디 실으면 가해자 말 두 마디 신는 거, 이게 맞는 언론관인 건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젠더 보도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특히나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건팀이든 그 수직 구조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 수직 구조에서 상의할 수 있는 회사면 정말 성공한 회사라고 생각해요. [중략] 내가 바이스랑 얘기하고 싶고, 캡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남성 이시고,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 그래서 아물따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쓴다?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언론사의 슬픈 현실이 아닌가... - B 기자*

지역 언론사에서 일하는 D 기자 역시 여성혐오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 오르고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확산하는 것을 체감하던 시점에, 보도국 내에서 이를 상의할 만한 동료들 찾기 쉽지 않았다. D 기자는 이에 대해 “순환이 안 되다 보니 바로 위 선배가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정체가 계속 돼 있” 는 지역 언론사의 구조적 환경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지역 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취재하면서 우리 사회 구조적 성차별과 폭력의 진상을 확인하고, 해당 보도를 기점으로 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조직과 동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성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구조 안에서,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사건이 커졌던 건데. 보니까 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조직과 너무 닮아있는 거예요. [중략] 저도 언론사라는 조직에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뭐랄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넌 위계적인 이런 조직 안에서 당연히 물들어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던 건데, 그 보도 이후에 저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 D 기자

젠더 보도가 뉴스룸에서 주변화된 영역으로 위치 지어지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젠더 이슈를 막내 여성 기자의 몫이라고 여기거나, 젠더 기사를 쓰는 기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기저에는 젠더 이슈 보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작동한다는 것이다(김세은·장은미·최이숙, 2019). 다만, 본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선 기존과 조금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젠더 보도를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으로 기대하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젠더 전담 조직과 연계해 계획하는 기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는 과정 중에 “가윗일이지만 배려를 요구하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과거와 달리, 젠더를 자신의 전문 분야로 인정받기 위해 “조직에 어필하는(H 기자)” 식으로 사고하는 젊은 기자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기자들이 젠더 보도를 새롭게 도전해 볼만한 영역으로서 긍정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그 어려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젠더갈등이 사회 주요 갈등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젠더 보도의 경우 기사 작성의 난이도가 높고 주의해야 할 요소는 많지만, 관련 보도 경험을 보유한 기자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없거나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게 저를 자극한 것도 있었고,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긴다면 어떻게 보면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길게 봤을 때 약간 블루오션 같다, 이런 생각이라고 해야 할까? [중략] 기사를 쓰면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고 내가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힘이라 생각했고... - H 기자

(젠더 이슈 관련 사안을) 팔로우하는 것도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략] 기자들이 쓰는 기사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다면 지적해주고 같이 바뀌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다음에 쓸 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사후가 아닌 과정 안에 있는, 그렇게 하나 생기면 좋겠다. “이런 표현은 이런 근거로 쓰면 안 돼요” 라고 매뉴얼을 가져오든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 D 기자

이렇듯 ‘미투’ 국면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을 취재하고 기사를 쓴 일선의 기자들, 특히 낮은 연차의 여성기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두된 ‘성평등 저널리즘’의 필요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선 위계적이고 폭압적인 문화의 언론사 조직에서 순응하거나 혹은 저항하며 살아온 기자 개인으로서의 각성도 함께 일어났다. 젠더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시선에 대해 맞서 질문을 던지며 고민을 본격화한 일선 기자들의 각성은, 향후 조직 차원에서 새로운 실험을 가능토록 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성평등 저널리즘은 기자들의 사회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 감지와 인식 전환,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저널리즘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 2. 젠더 개념의 상이한 해석과 접근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젠더’는 최근 들어선 계층, 이념, 세대 등과 함께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갈등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젠더 개념은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다수는 학계 전문가 집단과 대중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들어 기사 안에서 젠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제도권 교육 시스템에서 젠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적 없어 미디어 수용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 언급됐다.

기자 스스로는 관련 개념과 이론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수용자 대다수의 ‘성성’에 대한 이해가 ‘생물학적 성차性差’에 고착된 한계 때문에 젠더 개념을 사용하기 망설여진다는 것이다. 젠더가 국내 보도에서 ‘성별’ 등으로 좁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본래 의미가 품고 있는 성소수자, 성차, 성적 정체성 등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젠더가 갖는 풍부하고 다양한 맥락이 소거될 바엔 우리말로 ‘성별性別’ 혹은 ‘여남女男’으로 쓰는 편이 수용자들을 소외시킬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일부 기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더라도 젠더 보도에서 전문가 집단과 미디어 수용자의 간극은 좁힐 수 없을 것이라며 무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수용자의 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넓은 방송기자는 시청자를 세대별, 젠더별로 나뉘었을 때 어느 그룹을 평균으로 가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했다(I 기자). 상대적으로 노년 인구가 많은 지역 언론사 기자는 “비단 젠더뿐 아니라 외래어는 기사에 쓰지 않는 게 원칙(G 기자)”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성역할 이데올로기나 고착된 젠더 정체성의 수행 같은, 젠더 관련 심화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기자들도 있었다. 이런 고민 끝에 기자들은 수용자들이 젠더 개념의 의미와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든 내용을 ‘풀어’ 쓰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사에서 젠더 개

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괄호 안에 ‘gender’, ‘사회적 성별’ 을 병기하거나 각주를 달아 자세한 뜻풀이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미디어에서 쓰는 용어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사용하고, 사람들이 본 순간 알아들어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중략] ‘젠더’ 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한다. 대신 그 젠더라는 것, 통칭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 현상이나 그 개별적인 문제를 풀어쓰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래도 젠더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대체할 표현은 아직 못 찾았다... - C 기자

60대 이상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이 농촌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모르세요. 그런 상황에서 젠더, 젠더 갈등, 페미니즘, 이렇게 용어를 써버리면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고... [중략] 페미니즘이나 젠더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아직 편집국 구성원 안에서 정립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가 이 용어를 많이, 지금 그 중앙 일간지나 이런 데처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 G기자

기사 안에서 젠더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 것과 별도로, 외래어로서 ‘젠더’ 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다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언급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젠더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앞서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젠더’ 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번역어를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sup>5)</sup>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젠더폭력방

---

5) 비슷한 문제제기가 실린 칼럼으로는 이준웅 (2018. 2. 11)이 대표적이다.

지기본법’이었던 법안명이 정춘숙 의원의 발의 당시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으로 바뀐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정 의원 측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젠더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고 국어가 아니어서 법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검토의견을 회신받았다” (진주원, 2018. 12. 13)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정책용어를 살펴보면, gender는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에선 ‘여성’으로, gender equality는 ‘양성’ 혹은 ‘성’, gender perspective는 ‘성인지’로 통일성 없이 번역되고 있다.

젠더가 포함하는 맥락과 본래 의미를 모두 담는 우리말을 찾지 못하면서 기자들은 기사가 어렵고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다른 분야의 기사와 비교해 제한된 방송 시간과 지면 분량의 한계가 도드라지는 것이다. 젠더 개념을 둘러싼 이러한 혼선은 직관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의 글쓰기를 선호하는 기자들이 관련 주제를 다루는 데 장애로 작용했다.

*젠더도 쓰고 성(性)도 쓰고 하기는 했는데, 젠더라는 의미가 성별하고 좀 달리 특별한 의미를 점점 더 갖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젠더를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지정성별, 후천적인 성별, 본인이 원하는 성별, 포괄해서 ‘성별’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네. 일단은 독자의 편의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면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 B 기자*

미투 운동 이후 폭발적으로 증대한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과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담론적 조건에도, 질적으로 환영받을 만한 젠더 보도가 등장하지 못하는 데엔 이러한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기자들은 젠더 보도를 복잡하고 어렵게 받아들이는 현실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논의-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 성평등 가치의 실현-에 도달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기자들이 새로운 실험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대중이 젠더 개념에 대해 갖는 진입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된 한국일보 허스펙티브의 ‘젠더무물’ 코너<sup>6)</sup>가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기자들 사이에선 젠더를 우리 사회 논쟁적인 개념인 ‘페미니즘’의 대체어로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관찰됐다. 기사에서 페미니즘을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뉘앙스를 갖는 ‘젠더’나 ‘여성주의’ 같은 단어로 대체하는 식이다.<sup>7)</sup> 기사의 본래 메시지가 채 전달되기 전에 수용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편견과 오해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페미니즘이 반대 세력이 주도하는 악마화 작업을 거치면서 그 정당성이나 방향과 무관하게 오염되어버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H 기자)” 기자들의 자구책으로 보인다. 젠더가 처음부터 페미니즘 문제의식을 가진 사회과학, 혹은 사회분석을 촉구하는 개념 도구와 분석 범주로서 등장(배은경, 2004)한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역설적으로 보여진다. 페미니즘이 한국 사회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해석 틀로 떠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서 주목할 만하다.<sup>8)</sup>

*젠더는 말 그대로 되게 가치중립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 남성, 뭐, 그런 쪽에서 더 사회적인 성별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페미니즘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로 여성이 피해를 본, 침해 받은, 부당하게... 약간 그런.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에서*

---

6) 한국일보 젠더 뉴스레터 ‘허스펙티브’는 성평등을 주제로 한 ‘무물 콘텐츠’를 격주마다 연재하고 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뜻하는 ‘무물’이 나타내듯 일상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이다(이혜미, 2022. 6. 3).

7) 반면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라도 대체 불가능한 개념으로서 ‘페미니즘’ 용어를 더욱더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도 있었다. (B 기자 사례)

8) 데버라 캐머런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과거에도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뒤따르는 개념이었다. 역사학자들은 페미니즘이 ‘여성참정권 운동’ 때처럼 그 정치적 목적이 다양한 신념이나 관심사와 ‘양립’할 때에만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한다(Cameron, 2019/2022).



파생한 보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젠더 안에 페미니즘 보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A 기자

젠더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뉴트럴(neutral)해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페미니즘 팀’을 만들겠다기보다는 ‘젠더 팀’을 만들겠다가 훨씬 더 소구가 되고. 그래서 이런 편의성 때문에 젠더라는 단어가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좋아하긴 해요. 최근엔 여성들도 다소 배타적인, 다른 집단에 배타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만을 내세우고 싶지도 않고 해서... - F 기자

일부러 ‘젠더 기획’이라고 붙였거든요? 그냥 ‘기획’으로 나갈 수도 있죠. 노동 기획으로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꺾쇠를 달아서 전부 젠더 기획이라고... [중략] 페미니즘에 딱 맞는 기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 뭔가 괜한 분란과 오해를 살까 봐 조금 꺼렸던 마음이 있지 않았나... 제가 자연인으로서 발언하는 것은 상관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은 없는데, 어쨌든 독자들을 상정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독자가 오해 없이, 편견 없이 이 기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고민이... - C 기자

이러한 경향성은 “젠더라는 말이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의 페미니즘적 뿌리나 (여성) 정치적 함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약화됐다” (배은경, 2004)는 지적과 일치하며 후술할 기자들의 ‘페미니스트 정체화’와도 관련 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라 칭하는 모든 이가 동의할 만한 정의를 끝내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페미니즘은 “사회에서 여성들이 예측상태에 놓여 있고 이러한 예측은 정치적 행동을 통해 바뀌어야 한다는 근본적 믿음” (Cameron, 2019/2022)에 기초하고 있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상징체계 속에 언제나 배제됐던 여성들이 권리와 평등성을 찾는 과정에서 찾아낸 페미니즘 개념은 그러나, 현실에선 기자들로부터 점점 그 쓰임을 거부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도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후술하였다.

### 3. 성평등 보도의 의미 구성과 쟁점

기자들은 성평등 보도를 의미 구성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우선 성평등을 ‘양성평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한 후속 개념, 양성평등에서 ‘진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었다. 국내 정책 용어로서 양성평등을 둘러싼 논란<sup>9)</sup>을 알고 있는 기자들은 특히 성평등을 양성평등 개념과 대비하는 식으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은 양성평등 개념이 성 소수자를 배척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이미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정치화된 용어(이슬기, 2022. 5. 26)라고 인식했다.

두 개념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성별을 전부 배척한다는 의미에서 폭력적이고, 잘못됐고, 평등이라는 말 자체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아, 다른 성별은 다 됐고, 남과 여만 평등하게 하겠다는 건가? 그것도 좀 난센스고, 당연히 성평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략] 저희 조직은 이미 과거에 양성평등 표현은 쓰지 말자, 성평등으로 가자. 유모차 쓰지 말고, 유아차로 쓰자. 혼혈 쓰지 말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거 결정할 때 그때 이미 성평등으로 바꾸는 결정을 했죠. - C 기자

9) 2017년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의견수렴 과정에서 ‘성평등’ 용어가 사용된 것을 알게 된 보수·기독교계는 “동성애 조장” “여가부 해체” 등을 주장하며 반대에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이며,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 정체성 간의 평등’이라며 공식 성명을 통해 비난했다(최미랑, 2017. 12. 10).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정말로 없어져야 하는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저게 공식 용어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진흥원, 이런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요. 뭐랄까, 성평등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지금도 성교육 내용에 동성애, 이런 게 들어가면 난리 난다고 하는 보수 기독교계나 이런 데가 있다 보니... 저 단어가 되게 정말 별로인 건 맞지만 약간 징검다리처럼 쓰이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징검다리로서의 효용도 끝난 거 아닌가... - B 기자

성평등 보도를 의미 구성할 때 기자들은 또한 ‘여성’, 혹은 ‘여성과 관련된 이슈’를 보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동안 자신이 보도한 성평등 기사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 여성들이 겪고 있는 다종다양한 차별과 폭력의 상황을 취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식이었다. 이는 특정 사건, 취재원이 있을 때에 의미화 되는 언론 보도의 특성상 차별과 피해를 입은 여성이 사건 당사자로서 취재의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갖고 있는 편견을 바꿀 수 있는 부분, 편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그걸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보도들? 그걸 성평등 보도라고,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달라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었 것 같아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같은 것도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네. - J 기자

아직은 여성 문제에 많이 국한되어있는 것 같아요. 거기 포함해서 성 소수자, 사실 저는 소수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다양한 성별, 다양한 성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통칭해서... 젠더 문제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  
관련 인권이 많이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 C 기자

언론 보도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거나(personalisation),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사건 하나하나를 보도하는 관행(opticalisation)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평등 보도가 구조나 맥락이 아닌 ‘여성’, 특히 ‘피해자로서 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관행에 대해선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런 현상은 개인에 집중하는 미디어의 속성뿐 아니라, 가부장제의 작동 방식 등 구조적 맥락을 짚을 수 있는 언론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양적으로 압도적이며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직까지 미디어 업계와 학계에서 성평등 보도에 대한 의미 구성을 시도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성평등 보도 가이드라인 등 언론사와 유관 기관에서 발행한 제작물들은 대부분 실행 차원에서 접근하는 현실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서 젠더데스크 제도<sup>10)</sup>를 가장 먼저 도입한 한겨레는 자체적으로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며 그 목적이 “성평등한 사회에 기여하고, 성평등 요구의 목소리(불법촬영 근절 시위나 미투 운동, 디지털 성범죄 반대 운동 등)를 담아내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평등 보도를 위해선 “성범죄 기사 작성 때 몰카·도촬을 ‘불법 촬영’, 성적 행위를 강요해 만든 영상을 ‘성착취물’이라 적는 등 성차별·성범죄 보도 악습을 벗어나”야 하며, “성차별적인 사회 인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서 벗어나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성폭력 보도에서는 ‘피해자 관점’을 분명히 해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기준을 포함했다(이정연, 2021. 5. 19). 특히 이는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성평등의 의미와 범위가 사회에서 공유하는 담

---

10) 젠더 문제와 관련해 전문적이고, 성인지감수성에 부합하는 보도가 이뤄지길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국내 언론사들이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론의 정치적 맥락에 의해 변화하므로 관련해 페미니즘 정책공동체의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재경·김경희, 2012)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를 위한 젠더 균형 가이드’는 언론이 “평등과 다양성을 장려해야 할 책무”(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2021)를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성평등 보도’에 접근한다. 실천 방법으로 “불평등과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여성을 취재의 중심에 등장시키고, 여성의 목소리와 의견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식이다. 이밖에도 성평등 보도를 노동, 빈곤 문제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보도(전국언론노조 MBC본부, 2019. 3. 4)라는 접근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현장의 기자들에게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4. 소수자, 약자의 권리 옹호로서 성평등 저널리즘

본 연구 참여자들은 성평등 보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여성’에 대한 보도라는 인식만큼이나, ‘사회적 약자’를 향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불리하거나 취약한 위치(성폭력 피해자 등)에 있는 여성이 주로 취재 대상이 되는 현실과 관계있어 보인다. 기자들은 구조적으로 발언의 기회를 동등하게 갖지 못하는 ‘약자’이자 ‘소수자’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확산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본령이며, ‘공정’의 실천이라고 인식했다. 언론이 이들에게 억압과 예속, 불평등과 차별의 경험을 발화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에 부합하다고 생각했으며, 이 과정은 주로 ‘광장’과 ‘목소리’, ‘마이크’, ‘스피커’의 개념을 통해 묘사됐다. 또한, 성평등 보도 실천에 있어 기자들의 ‘공정’과 ‘소수자’에 대한 감각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으로서 ‘다양성’으로 연결됐다. 언론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인 다양성 확보를 위해 소수자로서 여성에 주목하는 기사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 영역의 다양성에 대한 지금과 같은 담론은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Diversity, Equity, Inclusion) 가치 실천이 기폭제가 됐다. DEI는 처음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추구 등을 강조하는 담론적 배경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무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유되고 있다(김선호·고홍석, 2021. 11. 1). DEI에 대한 논의는 주로 뉴스룸의 ‘인적 구성’ 과 콘텐츠 내 ‘재현’ 과 관련해 진행된다. 뉴스룸이 엘리트 위주로 구성될 경우, 주변화된 그룹과 개인들을 과소대표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기존의 저널리즘이 고립되기 쉬운 성폭력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문제의식과 상통한다.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이나 공론장에서 여성 목소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권리의 평등을 좀 가지려면, 이런 것들을 말해질 수 있는 공론장에서의 목소리가 평등해야 한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지, 뒤의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어서... [중략] 기회를 가지지 않는 목소리가 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마이크를 주는 그 자체를 광의적 의미에서 계속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 G 기자*

*구조적으로 남성이 위치한 곳과 여성이 위치한 곳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무게로 그걸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젠더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쪽의 입장을 좀 더 부각해야 그게 공정한 것이다? 사회 구조적으로 아직까지는 동등한 인권을 누리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의 위치가? 그래서 음... 남성이 성범죄를 당하는 것과 여성이 성범죄를 당하는 것이 같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 H 기자*

소수자 보도로서 성평등 보도는 또한, 국내 일부 언론사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고려중인 젠더데스크 제도와의 연결해 생각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젠더데스크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명칭을 ‘인권’ 데스크나 ‘다양성’ 데스크로 변경하는 것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결국 젠더데스크를 만들려는 취지가 기존 보도 틀에서 소외된 대상들을 조명해 좀 더 풍성한 보도를 하자는 것이라면 다양성이라는 표현이 더 맞고, 수용적 측면에서도 젠더데스크보다는 다양성데스크가 나올 것 (F 기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러한 시도가 조직 내부의 동력을 얻는 데에도 효과적이고 소수자로서 여성의 현실에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연구 참여자 중 현재 젠더데스크 보직을 맡고 있는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

노동 이슈라든지 이주민 이슈라든지 이런 건 워낙 다른 데에서 다 잘 챙기고 있고, 특별히 사내에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막 나서서 별로 하는 것은 없었고요. 그런데 혐오나 차별 발언 같은 것도 제가 나서서 제목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이슈라든지, 의견을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범주로 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 C 기자

젠더 영역뿐만 아니라 요즘 관심이 있는 인권이나 어떤 소수자,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젠더데스크가 이렇게 두루 지적할 수 있다면 언론사가 가야 할 어떤... 지금의 주목하는 가치들이니까. [중략] 회사에도 젠더라는 이름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을 느낀다면 내가 인권데스크가 되어도 좋다. 그런데 인권데스크가 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했던 영역, 젠더 기사의 비중이 많이 차지할 거다. 기존의 역할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인권데스크라고 해서 젠더 이런 분야를 줄이고 인권 기사를 확 늘이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 J 기자

주목할 부분은 J 기자(現 젠더데스크)가 말했듯, 소수자 보도로서 젠더 보도에 대한 접근이 자칫 젠더 이슈의 주변화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소수자 보도를 별도 섹션화할 경우, 같은 기준으로 분류된 소수자 이슈들 간 우선순위를 경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것<sup>11)</sup>인데, 이는 여성들이 계급, 인종, 젠더적으로 억압받는 다층위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해 사회적 위계구조를 타파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확장하는 페미니즘(이윤중, 2020)’ 과 유사한 인식을 공유한다. 신축성과 탄력성을 모토로 페미니즘이 의제화하는 사안들을 확장하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적 폭력과 성차별주의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확장하는 페미니즘’ 처럼, 성평등 보도가 소수자 보도로 분류된 이후에도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고 무엇을 의제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주체적으로 전략을 사고하고 발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젠더 이슈를 소수자 보도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또한 ‘교차성’ 을 포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과제를 낳는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불평등의 심화는 복합적인 인권 침해를 구조적으로 양산한다. 우리 사회가 성 불평등한 현실을 어떻게 재생산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여성의 억압적 현실을 공고화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선 여러 불평등 차원 간의 연관성에 대한 관찰이 필수적이다. 소수자 섹션에 포함된 젠더 보도가 자칫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 제 2 절 객관주의 관행과 충돌하는 성평등 보도

### 1. 성평등 보도의 핵심 전장으로서 성폭력 보도

---

11) 물론, 주변화의 이슈는 단순하지 않다. 언론의 물적 자원(신문의 지면, 방송의 전파)을 한정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중심과 주변부라는 구분의 전제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미투 운동이 본격화한 이후에도, 국내 기자들 사이에선 성폭력 보도가 성평등 보도의 전형이자 최저선으로 위치 지어지고 있다.<sup>12)</sup> 본 연구 참여자들 중 대다수는 그동안 다룬 성평등 이슈를 묻는 질문에 ‘성폭력 보도’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sup>13)</sup> 성폭력 사건 관련 보도는 중립적 관점을 가장하는 형식적 객관주의와 충돌하는 영역이자, 기존의 보도 관행과 성평등 관점의 적용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다.

한편, 기자들에게 성폭력 보도가 성평등 보도의 처음이자 끝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그만큼 기자들이 성평등 보도라고 명명할만한 취재 경험을 쌓을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젠더 보도가 부상하던 당시에 이를 주로 담당했던 기자들이 사회부(사건팀/경찰팀) 소속이었다는 점에선 경로 의존적인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가 소셜미디어나 언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문제제기를 결심하면서 등장한 미투 운동이 보여주듯, 성폭력 보도엔 사법 체계 안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되기 어려운 피해자의 서사가 담겨지길 기대되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젠더 구조와 성차별적 문화의 맥락이 반영돼야 한다.

*(만약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증거 불충분이든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든 대법원에 가서 무죄 확정됐다면, 기자님과 동료들이 냈던 의견의 가치는 달라지나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판결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잖아요. 안희정 사건도 1심부터 유죄가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보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준과 근거만 있다면 충분히 피해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와 동료들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관없이 그 가치는 달라*

12) 2000년대 이후 국내 언론학 분야에서 다룬 젠더 이슈 관련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최이숙·장은미·김세은, 2020).

13) 11명의 연구 참여자 가운데 10명이 ‘성폭력 보도’를 언급했다.

*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 E 기자*

여러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이 미투 운동 당시 신설되거나 개정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미투 운동은 성폭력 보도에 급급했던 언론으로 하여금 젠더 이슈를 둘러싼 현실을 성찰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노력이 조직과 보도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여전히 많은 경우에 언론은 젠더 보도에 있어 성폭력 사건,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 피해자로서 여성 대 가해자로서 남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젠더 관련 이슈를 좁게 해석하면서 동성애나 낙태, 여성운동 등으로 그 관심이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건’ 보도의 맥락 속에 놓인 성폭력 보도는 기자들로 하여금 기존 보도 관행과 성평등 보도에 대한 새로운 기대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야기한다.

지역 언론사 소속 D기자는 “성폭력 보도,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라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성평등 이슈를 의제화하고 싶어도, 최초에 보도를 가능케 했던 성폭력 ‘사건’ 외에는 발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D 기자는 언론이 성폭력 사건을 계기 삼아 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들 - 그것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와 위계적 질서, 성차별적 문화 등 - 은 다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폭력 보도가 ‘사건’으로만 소비되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상이 없어요.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보도 환경 안에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 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겪는 것들이나... 아니면 다름을 이유로 차별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쓰고 싶은데 일단 사건 기사 이후에는 딱히 버리니까.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가 항상 어렵더라고요. - D 기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내 언론사들의 취재 시스템에서 성폭력은 그것이 ‘사건’으로 명명될 때 비로소 가시화된다.

경찰과 검찰, 법원, 시민단체 등을 출입처로 둔 사건팀(경찰팀) 기자들의 발제와 보도는 당사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성폭력 사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겨레>의 경우엔 자사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에서 ‘성폭력 보도’를 ‘성평등 보도’와 병렬의 카테고리로 분류<sup>14)</sup>하고 있다.

미투 운동이 본격화하던 당시 언론계 바깥에선 성폭력 보도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는 외침이 이어졌지만, 정작 내부에선 많은 판단을 기자 개인의 역량과 의지에 맡기고 있다. 대부분 남자 보직자들로 이뤄진 뉴스룸 구조 안에서, 저(低)연차 여기자들 상당수는 기사 작성에 그치지 않고 선배들을 대신해 기사 가치를 판단하거나 자사의 스탠스를 고민해야 했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은 보도는 김지은 씨 보도였거든요. [중략]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피해자가 맞느냐, 이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 캡이 저와 저보다 후배인 여기자에게 계속 의견을 구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김지은 씨는 이런 이유에서 피해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그게 어느 정도 팀의 스탠스에 좀 반영됐던 기억이 납니다. - E 기자*

성폭력 ‘사건’ 보도가 갖는 나름의 의미에 대해 진단하는 기자도 있었다. A 기자는 성폭력 보도를 계기로 그동안 정면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젠더 관련 이슈들에 사회적 관심을 확장하는 등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잘못된 통념을 제거하고 ‘제대로’ 보도할 수 있다면, 주지하다시피 성폭력 보도가 갖는 강력한 화제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

14) 한겨레의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은 크게 ‘성평등 보도’와 ‘성폭력 보도’로 나뉘어져 있다. 성평등 보도에서는 등장인물의 성비, 성 고정관념, 성 차별 용어 및 표현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성폭력 보도는 피해자, 가해자, 선정성, 성폭력 이해 항목으로 구성해 ‘피해자 관점’의 보도를 중요하게 제시하였다(이정연, 2021. 5. 19).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다거나 그런 보도는 사람들 공분이 있고 그래야 관련법이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부양모부터 시작해서 친권 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중들의 감정적 동의가 없으면 ‘문제가 있으니깐 바뀌야 한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성폭력 보도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제가 뭐 그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깐 나중에 명분 쌓기로 생각한 것일 수도 있지만... - A 기자

이런 가운데 성폭력 보도가 점차 ‘골칫거리’로 위치 지어지는 현상도 관찰됐다. 피해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피소하거나, 언론사들 역시 관련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투 이후 성폭력 보도가 뉴스룸 내부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성폭력 보도는 기존 범죄 보도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딜레마의 가능성을 포함하며 향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유형의 기사이다. 성폭력 보도가 기자들에게 “잘 써 봤자 본전이거나 사고 나기 십상(A 기자)”으로 위치 지어지는 이유이다. 성폭력 보도가 추후 사실관계를 다투는 영역에서 논쟁적으로 다뤄질 여지가 많다는 것을 지난 몇 년 간 압축적으로 학습한 데스크급 관리자들이 발제 단계에서부터 부담스러워하거나 ‘회피’로 대응하는 경우도 늘고 있었다.

선배들이 어떤 저널리즘적 본령으로 기사를 안전 지향적으로 고치려는 게 아니라 명예훼손 소송 들어오면 골치가 아프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회사는 잘 보호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기자가 그런 사고를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심심하게 쓰는 것, 안정적으로 쓰는 게 체화되어있거든요. [중략] 그러다 보니 “야, 연합이 그

렇게 썼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간다.” 이게 레알 무서운 거 아닌가. - B 기자

성폭력 보도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데스크급 관리자뿐만이 아니다. 일선의 기자들 역시 추후 사법 기관의 판단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성폭력 기사 작성의 어려움에 대해 토론했다. 기자들은 더 이상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쓰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할 것을 주문받는다. 하지만 하나의 기사 안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와 객관적 저널리즘의 원칙, 그리고 추후 사법의 영역에서 판단 받을 것까지 염두에 두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찾거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피해자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 자신과 데스크 라인에 있는 동료 기자, 조직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사실 어떤 기사든 언중위(언론중재위원회)에 갈 수 있잖아요.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자기가 관리자로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못 봐요. [중략] 이미 데스크도 다 받은 상태였고 그랬는데 또 전화를 하더니 기사를 내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왜 못 나가느냐” 했더니, 뭐 “경찰 수사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언론사가 수사기관이냐” 했더니 “언중위 가기 싫다” 고... - D 기자

고소를 했고 당연히 피해자의 지위인데, 호소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니... 그때 그 사건을 취재했던 후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썼지만, 당시 회사에 같이 논의할 사람이 없어서 되게 난감했다... [중략] 성폭력, 성추행,

성 관련 사건에 있어서 법이 사회적 의식보다 뒤떨어지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법에서 무죄로 판명이 됐다고 그 사람에게 무죄, 무혐의의 지위를 그대로 줘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법원 판결 땡땡땡, 하면 그걸로 다 끝인 것 같은 그게 있잖아요? - B 기자

성폭력 보도는 피해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는 장이다. 무엇이 피해이며, 무엇이 그 피해를 유발했고, 무엇을 모두가 이견 없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해야 한다. 그를 위해선 기자 자신뿐만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 그리고 주변인, 보도의 수용자까지도 성폭력을 유발한 문화적 맥락과 사회의 젠더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페미니즘은 “누가 협상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지, 누구의 관심사가 명확히 표현되고 있지 않은지, 누구의 이득이 표명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누구의 진실이 발언되거나 인정되고 있지 않은지를 인식하는 과정의 정치”(정희진, 2018, 212쪽)이기도 하다. 협상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상상되어지는 성폭력 보도 영역에서 페미니즘과 저널리즘은 치열한 경합을 거듭하며 타협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 2. 기계적 균형으로서 객관주의 관행과 성평등 가치의 충돌

성폭력 사건 보도가 야기하는 질문 중 하나는 객관주의 관행과 충돌하는 성평등 저널리즘 실천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평등 보도 실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느 가치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자주 언급했다. 객관성은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자 ‘균형’과 ‘중립’ 등으로 의미 구성됐는데, 특히 여론의 공격에 취약한 젠더 보도의 경우 객관성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객관적인 것처럼이라도 보일 것인가(A 기자)”를 염두에 두는 등 기자가 어떠한 입장에도 치우쳐 있지 않

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여성과 남성기자가 함께 작성한 기사에 바이라인이 공동으로 나갈 경우엔 여성기자가 훨씬 심한 항의와 악성 댓글을 받는 사례가 보여주듯(김고은, 2019. 11. 6) 이는 조직에서 젠더 이슈 보도를 주로 쓰고 있는 여성기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다.

독자들은 그래요. ‘이런 기사 쓰는 사람도 여자고, 기사 안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다 여자’ 라고. [중략] 저는 의도적으로 여성 정치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치외교학 교수는 남성을, 시민단체 전문가는 여성을 섭외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제 보도의 공정, 그러니까 제 보도가 편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를 줄이더라고요. - F 기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나름의 균형, 어떤 분들에게는 성평등 보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최근의 여론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너희는 여성 문제에만 관심이 있냐? 우리 남성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 같은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 I 기자

A 기자는 대림동 사건<sup>15)</sup>을 보도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실천했던 ‘성비 균형’의 원칙을 소개했다. 대림동 사건 당시 A 기자는 여경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해 다양한 여론을 소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인터뷰이 섭외 과정에 가장 공들인 부분은 ‘성비 균형’이었다. 여경 무용론에 비판적인 ‘여경 ㄱ’의 의견을 소개했다면, 본문 안에서 또 다른 ‘여경 ㄴ’를 등장시켜 여경 무용론이 등장한 배경을 짚고 ‘무용

---

15) 2019년 5월 여성 경찰관이 주취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던 사건이다. 대림동 사건 이후 여경 혐오 담론이 급속하게 확산했는데, 경찰 성평등 개혁의 일환으로 여경 확대 방침을 세운 데 대한 반작용으로 분석된다.

론에도 일견 동의할만한 지점이 있다’ 며 한발 물러서는 것이다. 여경 무용론에 비판적인 입장은 ‘여경 ㄱ’ 뿐만 아니라 ‘남경 ㄷ’ 의 입을 통해서도 들음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했다(A 기자)”. 철저히 의견과 성비를 매칭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이러한 과정은 기자 자신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노력이 기사에 신뢰도를 더하고, 최초에 자신이 이야기하려 했던 주제가 ‘순수하게’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어떻게든 밸런스를, 예를 들어 남경이 여경을 옹호했다면, 여경을 비판하는 여경 의견도 실어주고. 그런 식으로 비판과 옹호를 성별로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중략] 등장하는 사람도 여성이고, 말하는 사람도 여성이고, 그러면 저는 그 보도는 그냥 그 자체로 또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별에 따른 의견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객관성을 띠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실어주는 게 중립성이지 제가 만약에 뭐, 한쪽을 더 많이 써준다거나, 한쪽의 입장을. 그런 건 중립성을 벗어나는 게 아닐까요? - A 기자*

그동안 형식적 사실주의를 객관주의와 동일시해 온 기자들에게 젠더 보도에 기대되는 규칙들은 물음표의 영역이다. 여타 다른 유형의 보도에선 균형적 시각을 담보하는 가장 기초적 방식이었던 ‘대립적인 입장을 모두 소개’ 하는 것이, 젠더 보도 영역에선 금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가해자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하거나 그대로 전하는 일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돼 금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객관성을 어느 쪽의 입장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불편부당(impartiality) 개념으로 해석하며 발생하는 혼란은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중에게 이념, 혹은 사상 체계로 받아들여지는 페미니즘의 경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체가 편향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



내 많은 보도들이 페미니스트를 언급할 때, 안티 페미니스트와 구도 안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중립적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게 콘텐츠의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페미니스트라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을 과연 기사로써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아무리 기계적 중립, 객관적, 어찌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 A 기자*

*‘이쪽 입장도 50을 다루었고, 저쪽 입장도 50을 다루어서 중립적으로 썼잖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알기 때문에 동영상이 콘텐츠 같은 것을 만들 때도 페미니스트와 안티 페미니스트를 50대 50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게 중립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콘텐츠가 수익이 나니까, 조회 수가 나오고... 조회 수가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 H 기자*

젠더, 페미니즘 이슈 보도를 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오해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자들은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의 객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젠더 전담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젠더 담당 기자의 경우 뉴스룸 내부에선 동료들의 회의적인 시선을, 외부에선 일부 폭력적인 독자(시청자)들을 상대로 불화하는 일이 잦아졌다. 젠더 평등한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 저널리스트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일까지 생겨났다. 기자들은 무력감을 느끼며, 동시에 젠더 보도에 있어 객관주의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린다 그린하우스(Linda Greenhouse)라는 기사를 좋아하

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법조기자를 30년 정도 했고 연방대법원 출입도 오래 한, 지금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대해서도 가장 잘 이야기하는 기자인데 그 분은 페미니스트로서 강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객관성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조한 말만 읊으면 된다는, 면피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인 기사를 쓰면서도 충분히 관점을 담을 수 있거든요. [중략] 우리 사회도 객관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요. - F 기자

기존의 형식적 객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화된 저널리즘 원칙으로서 객관성과 중립성, 인용보도의 원칙을 준수했던 대부분의 기자들에게 당혹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일선 기자들이 느끼는 혼란과 갈등은 젠더 보도에 대한 조직 내 구성원들의 평가절하 혹은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고민을 전담 인력과 조직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 3.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객관주의 재구성 - 현장 기자의 전략

객관주의 실천에 대한 고민은 비단 젠더 보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젠더 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형식적 객관주의와 그것을 경계하려는 페미니즘 저널리즘의 윤리 간의 충돌이 좀 더 극적인 방식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평등 저널리즘 실천을 고민하는 기자들 사이에선 형식적 객관주의의 대안이 될 만한 방법들은 찾는 모습도 관찰됐다.

G 기자는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 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결정을 한 바 있다. 타 언론사가 치정에 의한 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술한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가 남

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폭력 사건' 으로 건조하게 보도한 것이다. 기사엔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주장한 '애인 관계', 그리고 '피해자 여성이 가해자 남성을 무시했다' 는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자극적으로 다루었지만, 저희는 피해자 입장에서 쓰려고 했고. 가령, 그 남성이 주장하기를 “나는 전 애인이었고, 그 여성이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칼을 휘둘렀다” 고 했는데, 저희는 그 남성이 말한 ‘전 애인’ 이라는 것을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배제했고. 그다음에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는 것도 저희가 피해자에게 끝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남성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다 걷어냈고, 그냥 진짜 건조하게 ‘지금 어떤 남성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불러내서 위해를 했다’ 이렇게... - G 기자*

G 기자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흥미로운 것은 그가 “전 애인이라는 표현은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배제했다” 고 말한 것에 있다. G 기자는 타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주장을 사실인 양 전제해 수용자들에게 소구하는 기사를 쓸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관계에 대해 스스로를 전 애인이라고 주장했다” 고 직접 인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었을 테지만, 역시 선택하지 않았다.

한국형 객관주의 저널리즘은 “A가 이렇게 주장했다” 라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없이 기자가 확인한 ‘팩트(fact)’ 라고 본다. ‘팩트 체크’ 는 따라서 A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기자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B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반론을 실어주면, 기자는 A와 B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 보도를 한 셈이 된다.

하지만 G 기자는 기사에서 팩트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 ‘가해자가 어떠한 주장을 했다’ 가 아닌 가해자가 주장한 ‘내용’ 그 자체로 변경-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 는 이유로 과감히 생략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라도, 쟁점은 남았을 것이다.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와 애인 관계였는가?” 를 확인하는 과정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피해자 보호’ 와 ‘저널리스트로서 사실 확인’ 간의 관계가 추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역시 가해자의 주장을 기사에 옮기지 않음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다. 단순히 팩트에 대한 정의를 바꿈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교수가 학생 등을 두 번 이렇게 했대요. 저는 이런 묘사하지 말라고,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떠올리게 할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담당 기자는 지금 논쟁이 되는 게 ‘이게 성희롱이 맞냐, 아니냐’ 는 것이다. 그러려면 교수가 “등은 성적 인 부위가 아니다” 고 주장하는 걸 기사에 써야 한다는 거죠. [중략] 어려운 문제죠. 그래도 막을 수 있다면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한 명의 피해자가 괴로워할 수도 있다면, 우리는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쓰면 안 된다... - J 기자*

원칙으로서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해야 한다’ 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 기자들은 늘상 딜레마를 마주한다. J 기자가 설명하는 과거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기자는 교수의 주장을 실음으로써 독자들 스스로 교수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길 희망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피해자)을 중심에 둔 보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기자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 중심의 성평등 보도를 실천할 수 있는가? J 기자의 제언처럼 피해 행위를 묘사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쟁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텔레그램 대화록 내용을 ‘논란’ 이라는 제목 아래 세세히 보도한 언론사들은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일각에서는” 등을 언급하며 기계적 중립을 표방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일

부 언론사들은 해당 사안을 명백한 “2차 피해”로 규정한 후, 문제가 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했다(한소희, 2022. 10. 17). 가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선 메시지 내용을 유추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단순 전달한 후에 유족과 인권위, 피해자 측의 주장을 비중 있게 실으며 반박했다. 이에 따라, 만나절 내내 인터넷 뉴스를 달군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소개하지 않으면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의 보도가 가능했다.

한국 언론 현장의 객관주의 관행은 현실의 진실한 모습을 추구하기 보단 형식적 수용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저널리즘에서 객관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가, 객관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적이다. 향후 성평등 저널리즘 실천에 있어 객관주의의 해석과 적용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이다.

## 제 3 장 성평등 보도 실천과 현실적 한계

앞선 장에서는 젠더 이슈를 주로 담당하는 기자들이 성평등 보도를 어떻게 의미구성하고 있으며, 성평등 보도의 쟁점으로 무엇이 부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기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뉴스 생산 환경과 조직 문화 차원에서 성평등 저널리즘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 제 1 절 페미니즘 대중화와 기자의 위치성

#### 1. ‘담론적 페미니즘’ 부재 속 2030 페미니스트들

젠더 문제에 있어 ‘역차별’ 담론은 우리 사회가 이미 ‘평등’ 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간주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에 따르면 가부장제 질서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성평등 관련 노력들은 남성들을 역차별의 피해자로 만들며, 공정의 질서를 해치는 시도가 된다. 역차별 담론에 저항하며 생존의 언어를 찾던 2030 여성들 사이에선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부상(김보명, 2018)했고, 미디어는 본격적으로 이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목적의 기사 생산을 시작한다.

이처럼 새롭게 떠오른 독자(시청자)층으로서 2030 세대를 조명하게 된 데엔 레거시 미디어가 존재감을 잃어가는 현 상황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20대는 네이버(34.4%)에 이어 KBS(12.7%)와 JTBC(9.9%), 유튜브(7.9%)를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으로 꼽았는데(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언론이 플랫폼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미디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데엔 젊은 수용자들을 놓친 탓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2030 페미니스트들에게 소구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재’로서 젠더와 페미니즘이 소환된다.

미래 독자, 확장 독자, 타깃(target)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언론사도 기업이다 보니까 어디에 우리한테 돈 줄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비롯한 것 같아요. [중략] 어쨌든 지금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중기적으로, 2030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확장이나, 그런 브랜드 가치,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날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보고, 판단은 크게 틀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 K 기자

외부에서 컨설팅 받았더니 타깃을 여성, 특히 젊은 여성으로 하고 매거진식으로 가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페미니즘, 젠더 관련 기사를 쓰면 최소한 여성에겐 소구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생존 전략이기도 해요. [중략] 그런데 젠더, 페미니즘 기사 쓰려면 욕먹는 걸 감수해야 하잖아요. 시사인은 절독 사 태도 있었고.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지금도 기본빵을 하고 있는데. 여튼 저는 그래서 신문사들이 선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건이 그들이 젠더, 페미니즘 기사를 쓰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 E 기자

그럼에도 젠더 기사는 여전히 조직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도, 기자들 사이에서 소위 ‘이야기되는’ 기사거리로 발제되고 있지 못하다. 젠더 이슈에 주력하는 기자들에겐 2030 여성들을 염두에 둔 젠더 기사를 쓰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기자들은 무엇보다 예상되는 수용자로서 2030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해 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등을 중심으로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공동체성의 형성이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 시대 페미니스트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들이 공론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슈는 무엇인가’에 대한 미디어의 접근은 공란으로 남겨진 상태이다. 기자들은 젊은 페미니스트들을 담론의 장으로 데려오는 일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들에게 읽힐만한 기사를 쓰는 것은 “안티 페미니즘을 상대하는 것만큼 어려운(B 기자)”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예를 들어, 트위터에서 성행하는 ‘해시태그 페미니즘’이라든지 총공, 내지는 그런 쪽과 거리가 있는 거죠. [중략] 그렇다고 그분들과 저의 인식이 아예 달리 간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포섭하기에 담론적 페미니즘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나름으로도 노력해본 결과, 그분들은 저처럼 책으로 페미니즘을 배우는 분들이 아닌 거죠. ‘페미니즘’ 하면 ‘주디스 버틀러’ 하지 않는 분들인데,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것도 참 안티 페미니즘을 상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기는 해요. - B 기자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다양성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폭력적인 주장은 거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 터프(TERF,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미디어가 있잖아요. 요새는 다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존 언론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센 발언을,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미디어의 할 일은 오히려 그런 건 조금 쳐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C 기자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 담론의 대중화가 확산 혹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스스로 “82년생 김지영(소설)을 보고 처음 페미니즘을 접한 사람”이라 소개한 B 기자는, “일련의 트위터라든지 요즘에 영영 페미들이 접하는 식으로 페미니즘을 접한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다수 대중을 설득해서 성평등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도래할 수 있도록 전선을 넓히는 것이 언론, 학계, 시민단체 모두의 역할임에도, 점점 이 담론이 소수가 향유하는 것으로 좁혀지고 있다(F 기자)” 고 진단하기도 했다. 학계와 대중 사이에서 기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동시에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에 대해선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제가 지금 제일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 하나는 여성학자들의 어떤 인식, 사유 체계? 그들의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자주 읽고 있잖아요. 대중과 너무 괴리돼 있어요. 그리고 언론인들 중에서도,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뉴스를 안에서는 그 속도를 못 쫓아가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젠더라는 개념이 가뜩이나 어려운 데 이걸 너무 어렵게 접근함으로써 담론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 F 기자*

기자들은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대중문화에 기인한 이른바 제4물결로서 온라인-페미니즘에 대해 일종의 ‘두려움’ 을 느끼고 있었다. “요즘 나오는 젠더 기사는 너무 어렵고, 너무 조심스럽고, 그게 또 자기검열하게 만들고 진짜 제대로 알고 쓰지 않으면 쓰지 않느니만 못하는(E 기자)” 영역이 되어가고 있었다. (남초로 상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만큼이나 디지털 공간에서 한국 페미니즘이 대면하고 있는 과제는 어지럽고 복잡한 맥락 속에서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감조차 잡기 어려운 것으로 위치 지어지고 있다. 온라인 마초문화와 여성혐오 문화가 시장을 이루면서 등장한 워마드와 메갈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많은 기자들이 2030 페미니스트들의 관심사와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그 가운데 무엇을 공론의 장으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 2. 필수 조건이 아닌 기자의 페미니스트 정체화

우리 사회 곳곳에 성폭력과 불법 촬영, 스토킹 범죄, 여성 혐오 등 여성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억압적으로 존재하는 가부장제와 위계에 저항해온 실천으로서 페미니즘은 여전히 ‘불편한 것’으로 위치지어지고 있다. 이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선언하거나, 적어도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젠더 이슈를 ‘편견 없이 다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기자들이 취재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는 식의 저널리즘적 글쓰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국내 저널리즘 지형에서 페미니즘이 특정 진영과 철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위치 지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가 하려 하는 것들이 회사에서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문제를 만들고 자꾸 네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면 참... 저는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세계관이 넓어진 것 같고, 이제라도 공부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략] 선배들이 저를 붙잡고 “왜 너는 페미니즘을 공부하려 하니? 너 그럼 되게 뭐라고 해야 하지? 편협한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 D 기자*

*레저시 미디어들이 이런 젠더 친화적 디지털 플랫폼을 두는 게, 독립 조직으로서 확실하게 독립시켜서 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걸 통해서 XXX는 여성계 신문이야, YY는 여성계 신문이야, 라고 규정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죠?) 왜냐*

하면,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 A 기자

J 기자는 자신이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동안 자신이 우리 사회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사를 써왔다고 생각하면서도 “페미니스트란 청소년이나 대학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소양을 쌓고 역량을 길러야 하는 종류의 것”인데, 자신은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페미니스트로 정체화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취재를 통해 만났던 페미니스트들이 자기희생적이고 신념에 차 있었던 것에 비해 자신은 자격이 미달하여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하기에는 음... 결국은 아까 말한 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내가 해온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다만 개인적으로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나 생각에 많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네. 조금 페미니스트일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외부로 ‘저는 페미니스트예요’라고 말하기에는 나의 어떤 자격 기준은 내가 정한 것에 미달일 것 같다... 이런 것 같아요. - J 기자

일부 기자들은 페미니스트 정체화가 젠더 보도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볼 순 없어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기자 개인들이 조직 내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해 서로의 판단과 결정에 지지를 하는 식으로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이 향후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조직 내 성평등 보도를 강력하게 추동하는 구심점이 될 개연성도 언급됐다.

저는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고 있어요. 페미니스트 기자들이 ‘아, 나만 그렇게 유난스러워?’, ‘나만 힘들어?’, ‘나만 이렇게 생각해?’ 약간 이런 ‘개인들’ 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개인들이 아, 우리가 몇몇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어딘가에 있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 K 기자

페미니즘 보도의 명맥을 위해서도, 혹은 저희 기사 중에 문제가 되는 기사들에 대한 스크리닝을 위해서도 페미니즘 의식을 가진 기자들이 한 부서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이렇게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약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안에 접근하면, 이렇게 부서적인 협력도 도모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겨레의 사례를 참고를 했던 것 같고요. - B 기자

여성 저널리스트들이 '페미니스트'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부 여성기자의 경우, 자신의 오랜 경력 동안 삶의 궤적이 철저히 페미니스트 철학에 의해 뒷받침되고 해석되어질 만한 것이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로서 명명되기를 거부한다. 루이스 노스(2009)는 1988년 임명 당시 호주 최초의 여성 일간지 편집자였으며, 2008년 기준 입사 20년차인 호주 최장수 여성 에디터인 Pat을 인터뷰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인터뷰 과정에서 Pat은 1970년대를 회상하며 개인적으로 성 불평등과 고정관념 및 불문율에 어떻게 도전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녀는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스트 정치를 혐오하는 반페미니스트는 결코 아니지만, 非페미니스트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과거에 성차별에 맞서는 데 적극적이었음에도 Pat과 같은 여성이 페미니스트 가치를 경시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스는 이처럼 공개적으로 알려진 페미니스트들에게도 오늘날의 뉴스 매체에서 성공적인 저널리스트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F-word

(Feminist)’가 ‘부인되지는 않더라도 경시되어야 할 무엇인가’로 위치지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페미니즘은 남성 지배와 가부장제를 발본적으로 뒤엎고자 하면서도 때로 생물학적 본질주의로 회귀하는 등 부침을 겪으며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젠더 보도를 하는 데 있어 기자들의 페미니스트 정체화가 필수가 될 수 없지만, 페미니즘이 최초로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해선 기자들의 기본적인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각자의 진단과 대안에 따라 분화하고 있는 페미니즘들의 흐름을 좇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페미니즘이 계급, 인종, 젠더 등 교차적 억압 속에 있는 여성들이 다종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위계구조를 타파하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기자 사회 내에서도 점차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 2 절 조직 내 성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상상

### 1. ‘기울기’ 은유, 차별과 이항대립 구도로서 성평등

포스트 페미니즘과 착종되어 나타나는 역차별 담론은 여성들을 ‘가짜’ 피해자로, 남성들을 ‘진짜’ 피해자로 재현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국제 기준에 한참 뒤처지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성별 임금격차, 성별 직종분리, 유리천장 등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평등’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비유가 동원했는데 주로 ‘기울기’와 ‘평형’, ‘기울어진 운동장’ 등으로 수렴됐다.

*젠더 보도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갖고 있는 편견을 바꿀 수 있는 부분, 편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그걸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보도들? - J 기자*

결국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라는 이야기니까 그 기울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낮은 쪽에 있는 입장을 더 반영하고,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쪽에서 볼 때 어떤지를 더 써줘야 한다는 거죠. (성평등한 상태는 평형을 유지한 상태인가요? 기울기가 같아진 상태?) 기울기가 같아질 수 있도록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 남성의 입장과 여성의 입장을 똑같이 50 대 50으로 반영하는 것은 성평등이 아닌 거죠, 제 생각에는. - H 기자

언론 조직 및 우리 사회의 성평등한 상태에 대한 각기 다른 상상은 기자들이 관련 이슈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B 기자는 성차별적인 것들이 사라질 때에 비로소 성평등한 세상이 도래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성 불평등한 상태에 놓인 여성들의 삶의 현장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구조적인 이유로 차별적인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현재를 보여주고,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날것으로 들려줌으로써 미디어 수용자로 하여금 성평등한 세상에 대해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통계나 수치를 언급하기보다는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고 있으며,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을 기사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성 불평등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과 현장을 취재하고, 보여주는 기사를 쓰는 것? 그리고 그걸 어떻게 타개해갈 건지를 보여주는 보도를 해야겠죠. [중략] 저는 그 여성서사? 여성 재현에 관심이 많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타개책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좀 인터뷰 기사를 많이 썼는데, 그 개개인 여성의 삶에 관심이 많거든요. 통계나 이런 것보다

는, 그런 것 같아요. - B 기자

C 기자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별을 가진 사람들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도하는 것을 성평등 저널리즘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성평등이란 일반적으로 상상되어지는 여/남의 존재 외에도 다양한 성별의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역시 ‘차별’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평등’을 의미 구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차별이 여-남의 구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로서 성 소수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지면 안에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가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성별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 누구도 상처를 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보도가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쪽만의 입장에 너무 치우쳐서 보도되지 않는. [중략]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성별로 사느냐는 다른 삶을 구성하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별의 생각을 담는 게, 기사에 좀 다양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C 기자

기울기로 상상되는 성평등 개념은 생물학적 성별로서 여와 남의 관계를 마주보고 서 있는 대립 구도로 전제할 때 가능하다. 둘 사이에 ‘평형’이 유지될 때 비로소 ‘평등’ 상태가 도래한다는 식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불거진 바 있는 국제기구의 성평등 관련 지표 논란<sup>16)</sup>은, 기울기로 상상되어지는 성평등 논의에 한계를 드러낸다. 세계경

16) 20대 대선 당시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여성 인권이 꼭 ‘Inequal(불평등)’ 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UNDP의 ‘성불평등 지수’에서 성별 불평등 지수가 전 세계 11번째로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 WEF가 제시하는 ‘성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02위(156개국 중)라는 점이 근거였다(이종

제포럼의 국가별 성격차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2021년 기준 153개국 중 102위였다. 해당 지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격차’를 살피기 때문인데, 다수의 남성이 내전에 참여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촉진된 르완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성격차지수가 높게 나온 바 있다(김영화·이은기, 2022. 3. 8).

## 2. 조직 내 다양성 및 균형 요구와 현실적 한계

BBC는 지난 2017년부터 남녀를 동등하게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에서 ‘50 대 50’이라 이름 붙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50 대 50’은 여성 출연자의 비율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제작진은 매달 여성들이 얼마만큼 출연했는지를 조사해 50%에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BBC의 성평등에 대한 노력은 자사뿐만 아니라 외부 조직 전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 역시 2017년부터 뉴스룸 DEI 가운데 다양성 차원에서 성별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뉴욕타임스 남녀 성비는 2015년 55(남성)대 45(여성)에서 2021년 47(남성)대 52(여성)으로 바뀌었다. 나머지 1%는 성 소수자 직원이었다(김지현, 2021. 11. 3).

본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 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 상에 젠더의 재현과 성비 개선 노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다양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BBC의 50 대 50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뉴스/신문에서 출연자 성비를 조절하는 문제에 대해선 시급하며 절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치적으로, 기계적으로라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안 그래도 기자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여성 전문가가 너무 없다... 조금 더 많이 찾아보자, 없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

---

규, 2022. 4. 11).



를 구축하지 못하고 안 찾아본 게 아닐까. [중략] 지난해 신년 기획에 등장한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였고. 올해는 기계적으로라도 맞추자고 얘기를 했고. 네, 올해는 숫자를 맞춘 것 같아요. - J 기자

남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체 개편을 했는데도. [중략] 어쨌든 이걸 본 사람들은,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은연중에 스며들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이런 나이대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다... 학습 효과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작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균형,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 C 기자

기자들은 50 대 50 프로젝트가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원칙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각론에 대해선 다양한 우려를 표현했다. 무엇보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부재와 현실적 한계를 과제로 지적했다. D 기자는 언론사 조직 내 구조적 성차별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자들에게 전달될 재현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괴리를 느꼈다. 또한, 조직 내 구성원의 성비를 말 그대로 ‘비율’로만 접근했을 때 누락되는 지표들에 대해서 언급했다.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50 대 50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목표치에 도달하더라도 최초에 의도했던 성평등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개개인의 직종과 고용 상태, 연차, 보직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하는 것이다. 작가, 스태프 등 비정규직 다수가 여성 노동자로 구성된 방송사의 경우엔 특히 그렇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 이번엔 저희 회사가 여기자를 모두 계약직으로 뽑았거든요. [중략]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여성이 많아 보이죠. 그런데 자

세히 뜯어보면 거의 프리랜서 작가와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깐. 음... 그것조차 선배들은 이야기 해요. 이번에 한자리 수로 뽑힌 여성 기자들에 대해서도 ‘아, 이래서 남자를 뽑아야 해. 여자가 너무 많아...’ - D 기자

A 기자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남성 전문가를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포기해 보도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BBC가 처음 50 대 50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저항이 컸던 부분이다. 처음 BBC에서 성평등 캠페인을 제안했던 앵커 로스 앳킨스는 ‘100 대 0이 아닌 50 대 50’ 이 목표인 만큼, 품질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우려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로그램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출연진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섭외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지현, 2021. 11. 3).

전 막 굳이 그러려고 하지 않거든요? 정말 전문가인 사람들한테 듣는 게 맞고, 여성, 남성 비율로 전문가 멘트를 들으면 그건 오히려 전문성이 없는 멘트인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맞춰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걸 미래의 목표로 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 상황이랑 나중은 다를 것 같고. 현재는 그런 전문가에서, 전문가 그룹에 여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가서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해요. - A 기자

H 기자는 남녀 동수의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어느 특정한 시점에 50 대 50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궁극의 지향이고 성취의 지표가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50 대 50 프로젝트가 여성의 성비가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즉 마지노선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일 때에 비로소 의미 있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자칫 50 대 50 프로젝트가 일회성 행사나 기록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상상될 수 있다는 우려다. BBC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난해부터 ‘일관성(Consistency)’ 기준을 추가했다. 여성 출연 비율이 절반을 넘기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는지에 대해 역시 추적 관찰하겠다는 것이다(김지현, 2021. 11. 3).

*출연자 성비를 맞췄다고 엄청난 것을 달성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네. 50 대 50이라고 하는 것이 달성이 됐을 때부터는 다이어트 할 때 체중을 다 감량하고 나면 유지어터라고 하듯이, 유지를 할 때 쓰는 전략이지. 사실 50 대 50이 궁극적인 전략은 아닌 건데, 최소한의 마지노선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거라도 맞추는 게 어디냐 하는 생각은 있죠. 그것조차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깐. - H 기자*

50 대 50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지켜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사적인 선언과 의지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 기자는 기자 개인의 의지에 따른 실천에 맡겨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미디어에 꾸준히 노출된 덕분에 숙련된 남성 전문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인터뷰나 출연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여성 전문가를 소개하려면 그만큼 명분과 근거가 필요하다. 관성적으로 섭외해 왔던 남성 전문가 풀(Pool)을 제치고 새롭게 찾아낸 여성 전문가를 리스트 우선순위에 올리기 위해선 당장 반장이나 팀장, 데스크 등 설득해야 할 구성원이 한둘이 아니다. 회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 준다면, 여성 전문가 출연진을 구성해 그들이 적응하기까지 기다리는 일은 수년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봤다.

*발굴 해야죠, 억지로라도. 여성 전문가가 아주 조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죠.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풀이 생길 거고. 그런 모멘텀이 없으면 기계적으로 맞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그럼 재야에서 전문가를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저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회사가 선언해 줘야 방어가 되는 거죠. “선배, 회사가 하라는데요? 그럼 회사에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든지요” 이게 자술에 맡겨지면 기득권, 주로 목소리 내던 남성 선배들이 변화할 리는 없고요. - E 기자

여성 전문가 취재원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노력은 일부 언론사를 시작으로 진행 중이다. <한겨레>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실는 자사 특집 기사에 등장한 12명의 전문가 전원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성 전문가 취재원 DB 구축을 시작했다. 서로가 보유하고 있던 여성 전문가의 연락처를 공유했고, 이 리스트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이다(김고은, 2020. 11. 4). <블룸버그(Bloomberge)>는 지난 2018년 자사 콘텐츠에 여성 취재원 비율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자와 분석가들은 DB 구축을 위해 각자 담당하는 분야의 여성 전문가들을 접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18년 500명에서 시작해 2021년엔 2300명까지 늘어났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노력의 목표가 뉴스 경쟁력 향상이라고 밝혔다(진혜민, 2021. 3. 10).

국내에서도 여성가족부가 2017년에 여성·남성 성비 균형을 원칙을 제시한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sup>17)</sup>를 발간했지만, 현장에서 실천은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한겨레>는 뉴스 속 젠더 불균형은 여전하며, 자사의 오피니언 내·외부 필진 구성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배 이

---

17) 여성가족부가 2019년에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개정판)>은 2017년에 제작한 안내서를 보완한 것으로,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주제 선정에서부터 성평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여성가족부 블로그, 2019. 2. 13) 등의 내용이다.

상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정은주, 2022. 5. 16). 2022년 대선기간 중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4배가량 많이 등장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여성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고정관념과 함께, 선정 기준을 출연 경험으로 정해 기존에 미디어 노출이 많았던 남성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섭외되는 현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이슬기, 2022. 9. 10).

### 제 3 절 변화하는 언론 환경과 반페미니즘 정서 구조

#### 1.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백래시

국내 여성 정책이 ‘생물학적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출산 및 인구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우려를 낳는 가운데 새로운 페미니즘의 물결과 그 주체들은 다종다양한 혐오의 공격 앞에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비난, 공격이 대중에게 확산하는 이러한 흐름을 최근엔 ‘백래시’라고 부르고 있다(김보명, 2022).

젠더 이슈에 대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출고된 기사 뿐 아니라 기자 본인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여성 기자들을 향해 가해지고 있는 온라인 괴롭힘(online harassment)과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기자 보호에 소극적인 업계의 미진한 대처는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sup>18)</sup> 여성기자 중에서도 정치·법조, 소수자, 젠더를 다루는 기자들이 일상화된 수위 높은 괴롭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겪는 폭력에선 성폭력 요소가 확인되는 특징을 보였다.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욕설을 듣거나 성폭력, 살해, 가족 협박과 관련한 메시지를 받은 기자들도 있었다(노지민, 2022. 3. 18).

---

18) <Reach PLC(英 뉴스 발행사)>는 기자들을 위한 ‘온라인 안전 에디터’를 두고 있다. 기자들이 겪는 괴롭힘 사례를 취합해 예방책을 고민하며, 관련한 회사의 대응이 최신 상태의 것인지를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노지민, 2022. 3. 18).

일련의 상황들로 기자들은 젠더 보도를 이어가는 데 일종의 결심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E 기자는 젠더 기사를 쓰기까지 스스로 갖게 되는 자기 검열과 심리적 부담감을 토로했다. “독자들의 반박에 반박에 반박까지 대응할 수 있는 수준” 이어야 하는 젠더 기사가 “핫하지만 쓰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란 것이다. 실상은 그러한데 정작 기자 사회와 언론사 조직 내부에서는 여전히 단독과 특종 같은 스트(스트레이트) 기사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 “하나마나 한 소프트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는 젠더 기사를 취재하고 발제하는 데 전력을 쏟기란 쉽지 않다.

*요즘의 젠더 기사란 반박에 반박에 반박까지 대응할 수 있는 수준, 스스로 깊이, 이런 게 필요해서 솔직히 저는 이제 업무가 안 나요. 누가 젠더 기사 쓰라고 시키는 게 아니면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 게 아니면 이제 쓰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예요. 젠더보도가 핫하지만 쓰기는 더 어려워진 거죠. 그 괴리를 아무도 메꾸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사도 기자 개인도. - E 기자*

젠더 이슈 관련 보도에 대한 백래시가 일상화되면서 기자들이 취하는 전략 중엔 특정 사건의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비보도’와 시차를 두고 보도하는 ‘후행 보도’가 언급됐다. 기자들은 ‘후행 보도’에 대해선 이슈에 즉각 올라타지 않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비보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했다.

클릭수 경쟁에 매몰된 언론 환경에서 포털의 온라인 뉴스 경쟁은 터무니없이 과열된 상태다. 속보 경쟁과 클릭 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유튜브와 포털 뉴스 공간에서 특정 이슈를 아예 다루지 않거나 늦게 다루는 전략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는 일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기자들은 비보도 및 후행 보도와 관련한 결정이 이른바 “케이스 바이 케이스(K 기자)”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과 같은 당위로 설득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후행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동시 보도라기보다는 약간 타임라인상으로 보면 좀 뒤에, 사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게 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중략] 대체로는 커뮤니티발 보도들에 대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죠. 저희 팀은 쓰지 않는 게 맞을 때는 쓰지 말자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원칙은 좀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기사에 대한 원칙이 없다 보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 K 기자

혐오 발언 같은 것은 웬만하면 보도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걸 막 발 빠르게 보도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한 걸음 물러나서 지켜보고, 우리가 아니어도 그런 발언은 너무나 빨리 퍼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도만으로 새로운 2차 피해, 당사자 이름이 알려지거나 그럴 거 같은 건 되게 신중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욕도 먹었어요. ‘지금 이게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인데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도 우리 조직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 C 기자

젠더 이슈와 관련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기사들은 ‘객관’이란 껍데기를 씌웠을 뿐, 갈등을 격화하고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다.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글을 인용 보도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다수 생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클릭수가 곧장 수익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이러한 기사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선 기자 개인의 다짐과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을 보도하고, 보도하지 않을 것인가’ 에

대한 결정을 위해선 조직 구성원 전반의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요원하다. 때문에, 반페미니즘 정서에 저항하면서 젠더 기사를 전담하고  
있는 기자들의 분투는 각개전투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 2. 플랫폼 다양화 시도와 지속가능성

미디어 시장의 클릭수 경쟁은 이슈 중심으로 기사를 생산해 온 레거시  
미디어 조직들로 하여금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 나서게 했다. 제한된 지  
면과 뉴스 큐시트에서 젠더 이슈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나 새로운 서사  
구조를 발굴하는 데 한계를 느낀 기자들은 점차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새  
로운 플랫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는 오프라인 시장의 수익 구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포털에 의존하는 현실에 위기를  
느낀 언론사 조직 내부의 니즈와도 부합했다. 디지털 페미니즘 담론의  
주체인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native) 세대는 열성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상호 교류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레거시 미디어들은 새로운 독자층으로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포섭하  
기 위한 플랫폼 다양화 실험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젠더 영역에 특  
화된 콘텐츠들이 소개됐다. 경향신문의 ‘플랫(Flat)’, CBS의 ‘씨리얼  
(C-Real)’, 한겨레의 ‘슬랩(Slap)’, 한국일보의 ‘허스펙티브  
(Herspective)’ 등이 대표적이다.

*제가 느끼는 이 채널들의 유의미함은 뭐냐면, 여성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도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받고, 너무 힘들고, 우리  
맨날 성폭력 당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꼭 사  
건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여자들 얘기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  
니라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라는 것을. 어떤 이야기  
의 중심,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긍  
정적인 것 같아요. - C 기자*



기자들은 대체로 젠더 보도에 있어 플랫폼 다양화에 대한 효용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기존에 주력했던 매체(신문 혹은 방송)의 자장을 벗어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다는 사실이 주는 만족감과 젠더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용자들과 친밀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됐다. 디지털 전략을 고민하는 소속 언론사의 방향성과 부합하다는 점, 새로운 구독자층 확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었다.

지면에 나간다고 하면 톤 다운을 하거나,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온라인에서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자. 그런 게 있죠. (성평등 보도 실천 차원에서 온라인은 가능성의 공간인가요?) 네. 그나마 이거라도 있으니까, 하면서 쓰는 건 있었죠. 회사에서도 온라인 기사 많이 쓰라고 하니까. 온라인에서 반응이 나오면 이런 콘텐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걸 계속 쓰면 이 사람들을 새로운 독자층으로 끌고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는 계속하는 거죠. - H 기자

좀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죠. 지면에서는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하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이슈를 구구절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예전엔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고 이걸 2016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것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고. 지면이었다면 친절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뉴트럴(neutral)하게 설명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좀 더 인 커뮤니티(in community)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 C 기자

새로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이뤄졌던 실험들은 그러나 이제 생존 여부

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가성비와 접근성을 무기로 온라인 공간에서 활로를 탐색해 보려 했던 일부의 시도는 다소 주춤해진 상태이다. 플랫폼 공간에서의 활동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자 스스로 투입되는 노동력과 자본에 대해 콘텐츠로서 경쟁력을 증명해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 차원의 투자와 기민한 대응 전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언론사들도 초기엔 젊은 세대의 수용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시작했지만, 막상 실행이 되고나서부터는 전담 기자의 개인기에 맡겨둔 실정이다.

*레거시 미디어가 기존 작법으로, 노잼으로 만들면, 그건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충주시 홍보맨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깨는 시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했냐’고 물었더니, 몰래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몰래 한 것도 터지면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중략] 언론사도 돈 버는 영리 기업이니깐 플랫폼 다양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죠.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B 기자*

이런 가운데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의 중단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컸다. 젠더 다양성, 평등, 디지털 성범죄 같은 사회 문제를 기성언론과 다른 방식으로 짚는 등 의제 설정이 남달랐던 매체였지만, 6년 만에 막을 내려야 했다.<sup>19)</sup> 페미니즘 리부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을 전후로 닷페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페미니즘 경향의 대안 매체들이 등장했다. 젠더 이슈에 관심이 높은 2030 여성들에게 소구하겠다고 시작된 실험들은 그러나 대부분 중장기적인 전략을 내놓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들과 동반 성장하며 영향을 주고받았던 레거시 미디어의 시도들 역시 짧

---

19)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는 구독자에게 보낸 마지막 이메일에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소진되는 마음과 부족한 역량의 문제도 있었다”라며 “자원의 한계를 크게 느끼고,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었다”라고 해산에 이르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정민경, 2022. 5. 3).

은 기간 동안 리뉴얼을 반복하거나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등 부침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조회수나 구독자수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로서 그 확장성과 대중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부딪혔다. 초기엔 젠더 이슈에 관심이 높은 새로운 독자층의 발굴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었지만, 점차 시장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이고 있어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 제 4 장 젠더데스크와 성평등 저널리즘 제도화 노력

### 제 1 절 젠더 이슈 전담 조직의 운영 및 과제

#### 1. 다양한 형태의 젠더 전담 조직 도입

‘젠더데스크’ 보직으로 대표되는 언론사의 젠더 전담 조직 구성은 자율적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보도 뿐 아니라 조직의 전반적인 성인 지감수성을 고양할 수 있는 시작점(장은미·최이숙·김세은, 2021)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겨레>는 2018년 젠더 담당 기자 지정을 시작으로 젠더데스크 보직(2019) 및 젠더팀(2020)을 잇따라 신설하며 전문적인 시도들을 선보이고 있다. <부산일보>의 젠더데스크(2020)와 <국제신문>의 젠더 담당 기자 지정(2020)은 지역 언론사들의 젠더 보도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에도 <경향신문>의 젠더데스크 도입(2021)과 <한국일보>의 젠더 담당 기자 제도(2021)가 시도되며 다양한 형태의 젠더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 젠더데스크와 젠더 전담 기자, 젠더팀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고정된 형태가 아닌 각 언론사의 사정에 맞추어 자체 개발되고 있으며, 언론사들끼리 제도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젠더 조직 구성은 해당 언론사 뿐 아니라 주변 언론사들로 하여금 부상하는 성평등 보도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실제 도입을 고려하게 만드는 등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젠더 보도에 대한 의견 제시가 ‘보직자(젠더데스크)’ 혹은 담당 기자의 공식적 업무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그 중에서도 국내 도입 3년차에 접어든 젠더데스크 제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입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젠더데스크 제도가 갖는 상징성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젠더 보도를 둘러싼 관행의 개선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독자들에게도 ‘젠더 이슈를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담으려는 의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실 사내에 보여주는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어떤 친분으로 그냥 가서 ‘선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젠더데스크 직함을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어떤 기자가 ‘제가 젠더데스크하고 상의했는데, 이걸 이렇게 고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힘이 실려거든요. 그래서 젠더데스크가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막 페미니즘 관련 기사가 확 늘어나고, 막 균형이 맞춰지고 이러지는 않지만 존재가 주는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 C 기자

일단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일단 하고. 그 사람이 평생 젠더데스크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음 사람을 위한 공부도 시키고 자기도 공부하겠죠. 그 자리를 정말 일반 취재부장들 만큼의 데스크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면 그 자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순환하는 자리니까 욕심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해 보는 게... - D 기자

<한겨레>가 최초로 도입한 젠더데스크 제도는 <뉴욕타임스>가 지난 2017년 젠더 이니셔티브(Gender Initiative)의 일환으로 신설한 ‘젠더 에디터’ 제도가 모티프가 됐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젠더와 사회(Gender & Society)’ 섹션을 신설하고 젠더 에디터로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제시카 베넷(Jessica Bennett)<sup>20</sup>을 임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신문의 한 섹션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타임스가 기존에 다루고 있는 주제들 - 정치, 국제 문제, 과학, 건강 - 에 젠더 렌즈

---

20) 뉴욕타임스 초대 젠더 에디터인 ‘제시카 베넷’은 <페미니스트 파이트 클럽: 성차별주의 일터를 위한 생존 매뉴얼>을 저술한 작가이다(The New York Times, 2017. 12. 13).

를 투입, 뉴스를 재구성’ 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Deena Drewis, 2017. 10. 10).

다만, <뉴욕타임스>의 젠더 에디터 제도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젠더데스크 제도와는 명칭 뿐 아니라 그 역할과 권한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 2대 젠더데스크인 이정연 기자는 자사가 콘텐츠 생산을 담당하는 역할인 <뉴욕타임스>의 ‘젠더 에디터’ 대신,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내놓는 ‘젠더데스크’를 신설한 것(한지은, 2020. 7. 31)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sup>21)</sup> <부산일보>와 <경향신문> 등이 도입한 젠더데스크 역시, 편집권(Editing)은 제외된 ‘젠더데스크(Gender Desk)’ 개념이다.

젠더 에디터와 젠더데스크의 명칭으로 봐도, 이게 에디터는 어느 정도의 책임과 권한이 좀 확보된 그런 직책으로 읽히잖아요. [중략] (젠더데스크는) 되게 한국적인 문화가 그런 불편한 이야기, 업무상일지라도 ‘이걸 고쳐야 된다’ 같은 수정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갈등 조절, 혹은 감정 노동을 해가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좀 어렵죠. - K 기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완강하게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오케이, 젠더데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XX부장은 그렇게 주장한다. 그건 알고 있으라고. [중략] 이런 식으로 못 고치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 J 기자

취재부서에서 작성된 기사들의 사후 ‘스크리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젠더데스크는 주로 취재부서의 기사 생산 이후에서부터 출고 전까지의 단계에서 개입하게 된다. 개별 언론사가 상시 출고하는 온

---

21) 한겨레는 젠더데스크 이후 도입한 젠더팀이 젠더 관련 콘텐츠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재는 젠더데스크의 모니터링 업무가 함께 수행되고 있다.

라인 기사의 양이 하루 수백 건에 달하면서, 물리적으로 젠더데스크 1명이 자사의 모든 기사를 제때 소화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여전히 주력하고 있는 지면(신문)이나 메인 뉴스의 경우엔, 마감을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때문에 젠더데스크가 온전히 스크리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제가 하는 일이 결국은 보도 영역에 있어서 스크리닝 데스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면에 나오는 것들을 100% 보고 있고, 온라인은 기사가 사실 워낙 많기 때문에 다는 볼 수 없지만 우리로부터 나가는 기사에 있어서만은 놓치지 말자.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 요소라든지, 조금이라도 관점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보도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을 많이 잡으려고 하고 있죠. - J 기자*

조직 전반의 성인지감수성 고양이라는 최초의 기획 의도와 달리, 젠더 전담 조직에 그 역할을 맡 그대로 ‘전담’ 시키려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젠더 관점의 보도가 “시스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개별 기자들의 감수성이나 후천적 학습에 크게 의존(F 기자)” 하는 언론 현실에 비추어, 모든 기사가 젠더 중립적이고 성평등해야 함에도 그 노력과 판단을 젠더 전담 인력에 일임하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관성이 생길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 2. 지속가능한 젠더조직 운영을 위한 노력

국내 젠더데스크 제도 신설 당시 통찰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뉴욕타임스>의 젠더 에디터 제도는 2021년에 중단돼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의 처음이자 마지막 젠더 에디터가 된 제시카 베넷은 이에 대해 “이제는 NYT의 여러 분야 기사에 젠더적 시각

이 담기고 있다. 많은 사람이 젠더 보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젠더 에디터라는 특정한 역할은 정하지 않는다” (장현은, 2020. 11. 29)라고 설명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뉴욕타임스>의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했다. 일부는 한국과 미국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뿐만 아니라, 미디어 업계가 젠더 이슈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보여 온 점을 언급하며 국내 언론사의 젠더 전담 조직 해체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는 우리 사회도 궁극적으로는 <뉴욕타임스>처럼 젠더 이슈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엔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달성을 했다면 어느 정도 그걸 해소하고 발전적으로 좀 해체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약간 좀 한국과 미국의 언론계 상황이나, 그다음에 그런 성평등 의식 보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희로서는 젠더 전담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 K 기자*

*약간 여가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가부가 없어도 되는 세상이면 좋잖아요. 젠더테스크도 마찬가지로... - C 기자*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뉴욕타임스의 이번 결정과 별개로 국내 젠더 전담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J 기자)’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젠더 전담 인력들은 대부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조직 운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과 효능감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었지만, 조직 내 균질하지 않은 성인인지감수성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선 좀 더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목표 수립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현실적으로는 후임을 정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언급됐다. 조직 내에서 젠더 이슈에 특화된 기자로 각인되어 전담 인력으로 배치되는 것이 개인의 커리어에 어떤 의미가 될지에 대해 충분한 탐색이 끝난 일부를 제외하곤, 다수의 기자들이 관련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었다. 담당자의 개인적 희생에 기댄 제도의 운영이 후임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무상일지라도 취재 부서에 수정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위치 지어지는 것에 대한 감정노동(K 기자)” 이 클 뿐만 아니라, 기사 스크리닝을 위해 휴가나 휴일을 반납해야 하는 물리적 노동 강도가 주요한 이유로 언급됐다.

확실히 콘텐츠 제작과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있고, [중략] 내가 가고 나면 누가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 맞죠. 부담감이 크고, 되게 계속 갈등을 겪어야 되고, 감정 노동도 있어야 되고, 논리를 계속 개발하고 제시하면서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것? 네. 어렵죠, 네. - K 기자

제가 어쨌든 어떤 이 젠더 전담이라는 것을 잘 갖고 가야 이후에 후배들 중에서나, 누가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이 자리가 유지될 텐데 인정 투쟁을 엄청 하는 중이에요. 막 나는 젠더 기자야, 이라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중략] 누군가 핵우산, 강력한 의지를 가진 핵우산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겠다. - B 기자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스크리닝이나 데스크를 젠더 보도에 국한하지 않고 보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소수자 보도, 인권 보도가 강조되는 분위기

에서 젠더데스크 제도의 명칭이나 운영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역할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젠더데스크의 명칭을 아예 인권 데스크나 차별방지 데스크로 바꾸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향신문>에선 지난 2021년부터 젠더·소통데스크 제도를 운영 중<sup>22)</sup>이다. 해당 기자는 사회적으로 밀려나기 쉬운 소수자 이슈들에 대해 조직 내 환기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동시에 인권 보도를 위한 사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배포한 장애인에 대한 보도자료인데 [중략]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라고 표현해 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저는 젠더데스크가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페미니즘 공부해 본 사람은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요즘 보도자료 그대로 내보내는 언론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다각도로 출입처에서 나오는 표현들이랄지, 차별이 아니도록 표현을 쓰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젠더데스크라는 이름도 괜찮을 것 같아요. - D 기자

100% 모든 구성원들이 다 젠더데스크를 지지하지는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이 일의 중요성을 많이 몰라 준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젠더 영역뿐만 아니라 요즘에 관심이 있는 인권이나 어떤 소수자,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젠더데스크가 조금 이렇게 두루 지적할 수 있다면, 언론사가 가야 할 방향, 어떤 지금의 어떤 주목하는 가치들이니까... - J 기자

---

22) 경향신문이 운영 중인 소통·젠더데스크는 젠더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보도 관련 사안과 조직 내 소통을 담당한다. 장은교 초대 데스크는 “경향신문이 성평등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 노력하고 신경 써온 만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자는 고민과 내부 각오를 담아 도입하게 됐다” (김예리, 2021. 7. 2)고 설명했다.

젠더 전담 인력 지정과 병행할 수 있는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성격의 조직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젠더 보도를 주요하게 고민하고 스테디하는 몇몇 기자들이 평소 ‘네트워크’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래된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윗세대 기자들, 특히 ‘중년 남성’ 간부 중심의 의사결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라도 “평소 비슷한 결을 가진 기자들끼리 소통하는 일이 필요하다(F 기자)”는 것이다. 미투 이후 젠더 보도를 바라보는 민감성의 차이를 체감했거나, 남성 중심적 시각의 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기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 제 2 절 조직 내 여성 보직자 수 증대와 다양성 확보

그동안 페미니즘 저널리즘 연구들은 성평등 보도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 성차별적 인력구조와 생산문화에 대한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언급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 보직자 비율을 높일 것이 언급됐다. 실제 본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성평등 보도에 대해 ‘중년 남성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편집국(보도국) 분위기에 균열’을 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득권의 시선으로 생산되게 마련인 보도들에 여성의 관점이 투입되면서 성평등한 보도가 가능해졌으며, 그 실천은 주로 여성기자들이 맡고 있다고 인식했다. 자연스럽게 성평등 보도 실천의 첫 걸음은 ‘조직 내 성비 균형 조정’이었다. 기자들은 조직 내 여성기자의 수적 열세, 간부급의 낮은 여성기자 비율이 젠더 이슈의 제 설정을 방해하거나 누락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에 여성기자가 3명이나 뽑혀서 많아지긴 했는데, [중략] 제 위로는 여성기자가 전무하고 결정권자는 다 남성이다 보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힘이 없으니까.... 데스크 가운데 여성 한 명을 외부에서라도 데려왔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정 여성이 어려우면,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 D 기자

성평등 저널리즘 제도화 실천 관련 논의엔 언론사 조직 문화의 변화가 선행 조건으로 언급된다. 저널리즘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실천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 인력의 증가가 젠더화된 조직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적이지만(Steiner, 2018), 언론사 내 여성 인력, 특히 여성 상급자의 증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이어졌다(김경희, 2017 ; 김세은·홍남희, 2019). 지난 2005년, 중앙종합일간지 최초로 <한겨레>가 여성 편집국장을 임명한 데 이어 중앙일보에선 2017년에 첫 여성 편집국장이 나왔다(윤수현, 2021. 10. 8).

뉴스룸 내 여성 관리자급 상급자가 늘어야 한다는 전제가 당위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속에서 젊은 연차 기자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들은 젠더 이슈를 여성기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현재 상황이 향후 여성기자들의 선택을 협소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언론사들이 최근 젠더 전담 인력을 지정하기 시작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2022년 10월 기준, 국내 언론사 젠더 전담 인력은 모두 여성기자로 이는 자칫 ‘젠더 이슈=여성기자가 담당하는 것’이란 고정관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성기자 보직자 비율이 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그들이 언론사 내 관행처럼 굳어진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기인한 것이다. 뉴스룸 내 젠더 전담 인력이나 보직의 대상이 여성기자들에 제한된다면, 도리어 젠더 이슈가 여성기자들만의 전유물로 계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기자들이 소수자 이슈에 좀 더 민감도를 보인다는 경험칙을 배반하지 않으면서도, 여성기자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이 훨씬 같은 사안을 *크리티컬(critical)*

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여성 기자라면 페미니즘을 더욱 엄중하게, 그러니까 다른 기사 1, 2, 3, 4가 있을 때, 그거 제쳐놓고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성 기자들 중에서도 요즘은 조금 젠더 의식에 눈을 뜨고 다른 보도들보다 이걸 먼저 보도를 해야겠다든지, 먼저 파악하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좀 생겨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여성 기자가 젠더 보도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는 하지만... - B 기자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또한 여성기자라는 범주가 갖는 불완전성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다. 특히 주니어 연차 기자들은 간부급에 진입한 여성기자 선배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망감을 드러냈다. 여성기자 선배들이 중년 남성 간부들 사이에서 성평등한 보도를 위한 새로운 관점과 실천을 보여주고, 조직 내 성차별적 관행을 타파하는 데에도 기여하길 바라고 있었다.

무엇보다 여성 보직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기자 본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보도를 염원하는 구성원들과 사회의 기대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대해 그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하길 바라고 있었다. E 기자는 “여전히 사내 여성기자들 중에 여성 마초의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도 “전체 여성기자의 수가 늘면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도 “지금 당장의 현실은 아쉽지만, 아직은 일단 수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을 우선해야 할 때 (D 기자)”라고 생각하는 등 ‘타협’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여성기자, 여성 직장인들 가운데 일정 비율은 어쩔 수 없이 마초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 상황 안에서 이기기 위한 룰 (Rule)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잖아요.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중략] 저는 이번에 발탁된 그 선배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존 기득권 남성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회의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질을 따지기 전에, 지금 일단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 E 기자

사람이 있어야 목소리를 모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수가 돼야... - D 기자

여성기자 선배를 대하는 여성 후배 기자들의 고민은 ‘무엇이 여성인가’라는 페미니즘의 오랜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다양한 특질을 갖고 있는 여성들을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구성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기자들은 조직 내에서 성차별이 다른 아닌 여성에 의해 여성에게 행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마초적인 언론사 특유의 문화 속에서 생존한 여성 선배들을 향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서, 후배 기자들은 ‘여성기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자문자답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금도 한국 언론사 내부에선 “여성 기자는 누구이며, 여성 기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이들이 경합하고 연대하는 중이다. 기자들은 조직 내 여성 상급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보도의 다양성과 성평등 저널리즘이 ‘저절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이들에게 성평등 저널리즘 실천이란, 보도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 남성기자의 ‘타자들’로서 여성기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과 불공정한 조치들을 교정해가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선 전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젠더 관련 이론의 학습, 통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수집, 그리고 기존의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 보인다.

### 제 3 절 성평등 보도 가이드라인 제작과 실천

국내 언론들이 성폭력 피해를 ‘전시’ 하는 방식의 기사를 쓰는 것을 두고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성폭력 보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젠더 가이드라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가 제정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2012)’ 과 기자협회가 여성가족부,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과 제작한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2014)’ 등이다.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도 ‘미디어를 위한 젠더 균형 가이드(2021)’<sup>23)</sup>를 배포했다.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들도 직접 자사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가이드라인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A 기자는 평소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취재를 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동료들에게 상의하는 식으로 해결해 왔다.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독한 A 기자는 “잘만 활용되면 데스크와 의견이 대립할 때 원칙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 이라고 봤다.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듯 성평등 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는 기자들의 의견을 “정당화” 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진짜 몰랐어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뭐, 당연한 얘기를 했겠지 약간 그런. (이번에 읽어보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예요. 데스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덜 예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괜히 막 뭐, 제가 여성 스피커들을 등장시키거나 그럴 때마다 “이*

23) 제1대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장을 맡은 최진주 위원장은 가이드 발간 당시 “성폭력·성희롱 보도에 대한 준칙은 있지만, 일반적인 보도에 있어서 성차별적이거나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식의 보도를 지양하고 성평등한 보도를 위해 취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젠더 균형 보도에 대한 준칙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며, “한국 언론인과 학계 유관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한국에 맞는 젠더 균형 보도준칙을 새롭게 제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길 희망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2021. 3. 8)고 말했다.

사람 빼도 되지 않아? 이런 의견은 다수가 아닌데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제 의견을 정당화하는 그런 식으로도. 도움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나름 되게... - A 기자

가이드라인의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선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젠더 관련 사회적 인식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건 그 시점에 가장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답인데 시차가 발생하면서 정작 가이드라인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D 기자는 가이드라인의 제정만큼이나 활용에 대한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사를 쓰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지금 가이드라인은 가장 좀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만 요약, 함축해놓은 수준 아닌가. 납작하게. 그런데 그조차도 모르는 분에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지금 구조에서 ‘왜 이게 성차별이야’ 라고 한다면? 그런 기본적으로 요약한 것조차 알지 못하고 불쾌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교육이 분명 필요하죠. 가이드라인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D 기자

소속 언론사 조직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경험이 있는 K 기자는 제작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한다. 성평등 보도와 관련해 조직 내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성인지 감수성 정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구성원들과 젠더 이슈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공유됐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미리 점검할 수 있었다. 젠더 보도 전담 인력과 조직 구성을 위해 동료들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야 할 때에도 가이드라



인 제작 경험이 바탕이 됐다.

‘아,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 파악하게 됐고, 그런 것을 또 약간의 대비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제가 ‘남대생이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같은 논리를 폈을 때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미세한 차별을 가져온다’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부 모니터링을 하면서 경험들이 쌓여서 ‘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도 좀 정립이 된 것 같아요. - K 기자

본질적으로 피해는 “투쟁으로 획득되는 개념” (정희진, 2018. 211쪽)이며, 특히나 성폭력 보도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는 저널리스트는 긴장도 높은 작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충분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수반되지 않은 성폭력 기사는 피해자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며, 저널리스트는 직업적 윤리를 어긴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폭력을 스펙터클로 만드는 것이 피해자의 고통을 묘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 (손희정, 2017. 245쪽)라는 지적은 유효하다. 실제 미투 직후 등장한 가이드라인의 내용 대부분 기자들이 무신경한 방식으로 범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을 해서는 안 된다’ 식의 금기를 주로 언급했다.

조직 차원에서도 가이드라인 제정은 새로운 젠더 보도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비교적 초기에 시도해볼 수 있는 실천으로 꼽힌다. 젠더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는 식의 중장기적 실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고, 제반 사항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 내 균등하지 않은 성인지감수성이 고민인 언론사들 입장에선 사내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보도 윤리 관점에서 원칙 위주로 선언된 가이드라인의 경우 실천에 이르기까지 여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성차별적

고정관념 회피,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중심 프레임의 강조 이상의 무엇을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제 4 절 수평적 조직 운영을 위한 실험과 과제

지역 언론들은 젠더 이슈 보도와 관련해 중앙 언론들이 상상해본 적 없는 진취적인 제도를 실험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한 기자가 소속된 지역 언론의 경우, 편집국장부터 기자들까지 취재와 기사 작성을 두고 상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수평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은 인원으로 편집국을 운영해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도입한 제도인데, 오히려 조직의 강점이 됐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분위기에서 아래로부터 의견 개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덕분에 젠더 기사를 쓰기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직급이나 연차와 무관하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젠더 이슈에 대해선 주로 후배 기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취재와 기사 작성과 관련해서 조언을 주고받는다.

*취재원이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서 대놓고 ‘저 아줌마’ 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기사에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바로 지적을 하죠. ‘현장에서 취재원한테 차라리 얘기를 해서 아줌마라는 표현 말고 다른 말을 받아와라.’ [중략] 그러면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동료가 지금 잡아줬구나’ 이렇게 선뜻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무엇보다 ‘이런 표현은 안 돼’ 라고 짚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박자가 맞아 돌아가야 한다고 봐요. - G 기자*

젠더 관련 이슈는 개별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공론화를 염두에 둔 공동의 의제화가 필요하다. 지속적 관심과 환기를 위

해선 다함께 기사를 끌고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사 소속 D 기자는 지역 내 타사 기자들에게 “같이 하자. 만약 내가 못하더라도 선배가 하면, ‘이거 봐라. 우리도 해야 한다’ 는 식으로 내부에 설득하기 쉬워진다.” 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누가 먼저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후발이라도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니 함께 하자” 고 설득한다는 것이다. 규모와 단위가 큰 사건의 보도일 수록, 언론사간 연대와 협업의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다.

젠더 이슈 전문가 등과 함께 평소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 또한 지역 언론사엔 필수적이다. 인적 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한 젠더 전담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도 통찰을 제공한다.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젠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지만, 많은 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이다. 기자들끼리 스터디 모임을 꾸리는 식으로 정기적 만남의 자리를 갖고, 고민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대안을 상상하는 데 있어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기자들이 스터디 조직인 ‘페미라이터(femi-writer) 인 한겨레’ 를 시작한 것이 이후 젠더 조직 구성을 추동하는 구심점이 됐다.

*여성학 교수님하고 여성단체의 오랜 경험이 있는 대표들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언제라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카톡을 하든지, 바로 전화를 하라고. 그러면 본인의 어떤 노하우나 경험에 있어서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몇 명한테 이제 벌써 승낙을 받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는든지, 어쨌든 간에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J 기자*

규모가 작은 지역 언론사일수록 실험적인 제도들을 도입하고,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 언론의 경우 젠더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젠더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갖고 이슈 발굴에 힘쓸 주니어 연차의 기자가 많지 않으며, 여성기자의 수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명의 기자가 여러 분야와 출입처를 담당하는 지역 언론사 사정에 비춰봤을 때엔 젠더 전담 인력이나 팀을 두기란 불가능에 가깝다(윤유경, 2022. 10. 19). 젠더 담당 기자가 취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부처나 행정, 그 밖의 기관이 미비하다는 점도 한계로 언급된다. 남성 중심의 보직자/임원 구조, 주류 위주의 뉴스 가치 판단 기조(사회적 약자 배제) 등도 지역 언론이 젠더 이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박주현, 2022. 10. 20; 전주시사회혁신센터, 2022).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참사’ 로까지 명명됐던 국내 미투 보도 이후, 젠더 이슈를 정확히 다루기 위해선 언론계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성찰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언론들이 새롭게 부상한 젠더 이슈들을 충분히 숙의하고 관련 개념을 학습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일부 여성 기자들이 뉴스룸 내 기존 ‘객관주의’ 관행이 여성과 소수자의 경험을 배제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선보였다. 스스로 성평등 보도 실천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조직 내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받는 젊은 여성기자들이 주로 이런 움직임을 추동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 보도 실천을 위해 논의할 쟁점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젠더 보도에 주력하고 있는 이들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2장에서는 기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성평등 보도의 개념과 쟁점을 정리했다. 최근의 성평등 보도는 주로 미투 국면에서 사회부에 소속돼 기사를 썼던 일선의 기자들, 특히 낮은 연차의 여성기자들을 주축으로 실천되고 있다. 이들은 젠더 이슈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계 전문가 집단과 대중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젠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제도권 교육 시스템에서 젠더에 대한 설명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적 없어 수용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 언급됐다. 일대일로 조용하는 한국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젠더 개념을 풀어 쓰거나 설명을 곁들이는 방식을 동원하지만, 개념 설명의 어려움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 젠더 기사는 경제성 측면에서도 도전받고 있다. 기자들은 젠더 개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도우면서, 동시에 담론 수준의 기사를 원하는 학계와 주요 수용자로 상정되는 2030 페미니스트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과제를 맞닥뜨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자들 사이에선 젠더를 논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페미니즘’의 대체어로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관찰됐다.

기자들은 또한, 성평등 보도를 의미구성 하는 데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성평등을 ‘양성평등’ 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한 후속 개념, 양성평등에서 진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등이었다. 성평등 보도는 ‘여성’ 에 대한 이슈를 보도하는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소수자, 약자의 권리 옹호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 역시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이는 특정 사건, 취재원이 있을 때에 의미화 되는 언론 보도의 특성상, 차별과 피해를 입은 여성이 사건 당사자로서 취재의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자들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는 성평등 보도의 유형으로 성폭력 보도를 꼽았다. 성폭력 보도는 형식적 객관주의가 내세우는 원칙과 일상적으로 충돌하고 있었으며, 이는 젠더 보도를 전담하는 인력들의 비전문성에 대한 뉴스룸 안팎의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객관성을 어느 쪽의 입장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불편부당(impartiality) 개념으로 해석하며 발생하는 혼란은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대중에게 이념, 혹은 사상 체계로 받아들여지는 페미니즘의 경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체가 편향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식이었다.

3장에선 성평등 저널리즘이 기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뉴스 생산 환경과 조직 문화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어떤 한계를 맞닥뜨리고 있는지 살폈다. 이른바 제4물결로서 온라인-페미니즘의 부상 이후 언론사들은 2030 페미니스트를 염두에 둔 시도를 선보이고 있었다. 기자들은 젊은 페미니스트들을 염두에 둔 기사를 쓰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면서도 담론적 페미니즘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읽힐만한 기사를 쓰는 것이 안티 페미니즘을 상대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기자들은 페미니스트 정체화가 젠더 보도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진 않지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조직 내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해 서로의 판단과 결정에 지지를 하는 식으로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언론 조직 및 우리 사회의 성평등한 상태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은 기자들이 관련 이슈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

했다. 성차별적인 것이 사라질 때에 성평등한 세상이 도래한다고 믿는 기자와, 다양한 성별을 가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 성평등이라고 설명하는 기자의 실천 양상이 달라지는 식이었다. 다양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는 BBC의 50 대 50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기자들 대부분 그 취지엔 공감했지만, 실천을 위한 각론에선 기계적으로 해석할 때 생기는 딜레마 등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

젠더 이슈에 주목하는 기자들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서 반페미니즘 정서 구조와 관련해서도 도전을 받고 있었다. 젠더 보도에 대한 백래시가 일상화되면서 기자들이 취하는 전략 중엔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비보도’와 시차를 두고 보도하는 ‘후행 보도’가 언급됐다. 하지만 클릭 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특정 이슈를 아예 다루지 않거나 늦게 다루기 위해선 조직 내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클릭 수 경쟁은 이슈 중심으로 기사를 생산해 온 레거시 미디어 조직들로 하여금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 나서게 했다. 가성비와 접근성을 무기로 2030 여성들에게 소구하겠다고 시작된 실험들은 그러나 중장기적인 전략을 내놓지 못한 채 많은 경우 종료된 상태였다. 이들과 동반 성장해 왔던 레거시 미디어의 시도들 역시 부침을 겪고 있었다.

4장에선 젠더 전담 조직 - 특히 젠더데스크 제도를 중심으로 성평등 저널리즘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일부 언론사들이 운영 중인 젠더데스크 제도는 국내 최초 도입 3년차를 넘어가며 기자 개인의 커리어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상태였다. 뉴스룸 내 여성 보직자 수 증대라는 원칙이 어떻게 성평등 저널리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시작됐다.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은 성차별적 고정관념 지양과 피해자 중심 프레임의 강조 이상의 무엇을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내 언론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평적 조직 운영과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제도들을 실험 중이었다.

국내 성평등 보도에 주력하는 기자들은 성평등 보도에 대한 개념적 정

의가 이뤄질 만큼 충분한 경험이 누적되지 못한 국내 언론 토양에서 나름의 해석에 의거해 성평등 보도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국내 성평등 보도의 일종의 개척자(pioneer)들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해당 기자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국내 성평등 보도 실천의 현실과 과제를 진단하고자 했다. 이들 기자들이 미투 운동 이후 젠더 이슈 보도에 본격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성평등 보도가 갖는 역사적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 성평등 보도 영역에서 성폭력 사건 보도가 여전히 최저선이자 전형으로 위치 지어지고 있는 현실도, 젠더 보도가 부상하던 시기에 이를 주로 담당한 기자들이 사회부 소속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엔 경로 의존적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이라는 추상의 가치를 보도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선 기자 사회 전반에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론의 장을 열기에 앞서, 젠더 보도에 주력하는 기자들이 앞서 경험했던 딜레마 상황과 구체적 고민들은 논의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젠더 전담 조직 운영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만큼 그에 대한 연구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 형식적 객관주의가 페미니즘 저널리즘 윤리가 목표하는 피해자 보호와 충돌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 가능성의 탐구와 대안 제시 역시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김경모 (2003). 텔레비전 뉴스의 성 역할구도 재생산 보도관행과 저널리스트의 성차 - KBS, MBC, SBS의 저녁종합뉴스 내용분석. <한국방송학보>. 17(3). 197-238.
- 김경희 (2017). <뉴스 안과 밖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경희·강혜란 (2016). 여성의 과소재현과 상징적 소멸. <미디어, 젠더 & 문화>. 31(3). 53-96.
- 김보명 (2018). 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사회>. 118. 199-138.
- 김보명 (2022). ‘백래시’ 라는 암호문 읽어내기. <함께가는 여성>. 233. 6-7.
- 김세은 (2018). 뉴스는 여성을 어떻게 다루는가?. <방송기자>. 41. 16-19.
- 김세은·홍남희 (2019). 미투 운동(#Metoo) 보도를 통해 본 한국 저널리즘 관행과 언론사 조직 문화: 여성기자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4(1). 39-88.
- 김세은·장은미·최이숙 (2019). <젠더 이슈 보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수아 (2018). ‘인권 침해 범죄’ 와 ‘구조적 차별’ 관점에서 보도해야 -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언론 보도. <신문과방송>. 567. 48-51.
- 김훈순 (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범죄뉴스와 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27. 63-91.
- 남재일 (2006). <한국 언론윤리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재단.
- 남재일 (2008). 한국 객관주의 관행의 문화적 특수성: 경찰기자 취재관행의 구조적 성격. <언론과학연구>. 8(3). 233-270.
- 박대민 (2015). 사실기사의 직접인용에 대한 이중의 타당성 문제의 검토. <한국언론학보>. 59(5). 121-151.
- 배은경 (2004). 사회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 연구: 개념사적 접근. <페미니즘 연구>. 4(1). 55-100

- 배은경 (2019). 한국사회의 젠더와 젠더갈등 :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이대환·방민호·한준·김원섭·김왕배·배은경·강원택 (편). <막힌 사회와 그 비상구들>. 285-316. 아시아.
- 손희정 (2015). 페미니즘 리부트. <문화과학사>. 83. 14-47
- 손희정 (2017). <페미니즘 리부트: 혐오의 시대를 뚫고 나온 목소리들>. 나무연필.
- 유선영 (2002). <여성과 언론:여성보도 개선방안 연구 : 중앙일간지와 여성신문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언론재단.
- 이윤중 (2020). 페미니즘의 확장성을 지향하며. <문화과학>. 104. 23-48.
- 이재경·김경희 (2012).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28(3). 1-33.
- 이진옥 (2018). 성평등. <여/성이론>. 38. 188-205.
- 임영숙·엄정윤 (2005). 언론사 간부직 여기자의 성 인지 의식과 보도태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호. 144-181.
- 장은미·최이숙·김세은 (2021). “우리는 더디지만 나아가고 있다” : ‘미투 운동(#MeToo)’ 이후 성평등 보도를 위한 한국 언론의 실천과 과제. <미디어, 젠더 & 문화>. 36(3). 187-236.
- 전가영·유세경 (2020). ‘미투’ 운동의 매체 프레임과 변화에 대한 연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보도와 실재의 재구성. <미디어, 젠더 & 문화>. 35권 2호. 49-101.
- 정희진 (2018).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 루인·정희진·한채운 (편)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 조연하 (2019). 방송보도의 객관성 심의결정 논리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5(2). 1-42.
- 최이숙·김은진 (2019). 증언과 저널리즘 <JTBC 뉴스룸>의 성폭력 피해자 생방송 인터뷰 분석. 언론과 사회. 27(2). 47-97.
- 최이숙·장은미·김세은 (2020). ‘미투 운동(#MeToo)’ 이후 젠더 이슈 보도의 성과와 한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04. 122-163.
-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2021 언론수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허라금 (2008). 여성주의 성평등 개념을 통해 본 성주류화. <여성학논집> 25(2). 45-79.
- 홍남희 (2021). 젠더 평등과 미디어 : 프레임의 정의론과 영국 미디어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9(1). 56-99.
- 홍지아 (2016). 여기자들이 경험하는 직업과 성/젠더의 관계와 양성평등적 뉴스 생산에 대한 인식. <한국여성학>. 32(3). 27-59.
- 홍지아 (2017).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 보도: 4개 언론사의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3. 186-218.
- Callison, C., & Young, M. L. (2019). *Reckoning: Journalism's limits and possibil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Cameron, D. (2018). *Feminism*. 강경아 (역) (2022). <페미니즘>. 신사책방.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38.
- Fiske. J.(1994). *Television Culture*. London: Methuen.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ones, J. (2021). Caring with the public: An integration of feminist moral, environmental, and political philosophy in journalism ethics. *Journal of Media Ethics*. 36(2). 74-84.
- North, L. (2009). Rejecting the ‘F-word’ : How ‘feminism’ and ‘feminists’ are understood in the newsroom. *Journalism*. 10(6). 739-757.
- Sandra Harding (1991).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 : Thinking from Women's Lives*. 조주현 (역) 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나남.
- Scheufel,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 Communication*. 49(1). 103-122.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s: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Longman Publishers: USA.
- Steiner, L. (2017) Gender and Journalism.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URL: <https://oxfordre.com/communication/display/10.1093/acrefore/9780190228613.001.0001/acrefore-9780190228613-e-91>
- Steiner, L. (2018). Solving journalism's post-truth crisis With feminist standpoint epistemology. *Journalism Studies*. 19(13). 1854-1865.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 Free Press.
- Wien, C. (2005). Defining objectivity within journalism. *Nordicom Review*. 2. 3-15.

#### <인터넷 기사>

- 김고은 (2019. 11. 06). ‘미투’ 2년...젠더 이슈 담당 기자들, 여혐·사이버폭력 내몰려. <기자협회보>. URL: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6824>
- 김고은 (2020. 11. 4). 젠더 문제 ‘확성기’ 를 켜라. <기자협회보>. URL: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8388>
- 김선호·고홍석 (2021. 11. 1). [한국 언론에 DEI가 필요한 이유] 사회 갈등 완화하는 언론의 DEI 다양성 구현 정도 조사부터 시작해야. <신문과방송>. URL: <https://www.kpf.or.kr/front/news/articleDetail/592214.do>
- 김영화·이은기 (2022. 3. 8).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 진짜 없을까?. <시사인>. URL: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13>
- 김예리 (2021. 7. 2). 디지털 전환 나선 경향신문, 스포트라이트부에

젠더데스크까지. <미디어오늘>. URL: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94>

김지현 (2021. 11. 3). [BBC ‘50:50 평등 프로젝트’] 미디어의 성평등  
 재현 위한 풀뿌리 캠페인. <신문과방송>. URL:  
<https://www.kpf.or.kr/front/news/articleDetail/592217.do>

노지민 (2022. 3. 18). 여성기자 온라인 괴롭힘, ‘폭력’ 규정하고 적극  
 대응해야. <미디어오늘>. URL: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08>

박주현 (2022. 10. 20). ‘남성 중심’ 전북지역 언론들, ‘젠더  
 데스크’ ‘성평등 저널리즘’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북의소리>.  
 URL: <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9781>

박준우 (2022. 3. 10). 2030 남녀 엇갈린 표심… ‘젠더 갈라치기’ 에 빨난  
 ‘이대녀’ . <JTBC>. URL: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0326](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0326)

송창한 (2022. 4. 18). ‘최고의 미투이자, 최악의 미투’ 라고 말하는  
 이유. <미디어스>. URL: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601>

여성가족부 블로그 (2019. 2. 13).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개정 배포. URL: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464840909>

윤수현 (2021. 10. 8). 남성·백인 중심 뉴스룸 손보는 해외 주요 언론.  
 <미디어스>. URL: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35>

윤유경 (2022. 10. 19). 젠더데스크, 지역언론에서도 가능할까.  
 <미디어오늘>.  
 URL: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07>

이슬기 (2022. 5. 26). [나와, 현장] ‘성’ 평등과 ‘양성’ 평등. <서울신문>.  
 URL: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27025013>

이슬기 (2022. 9. 10). 시사·보도프로그램 출연 남성 비율, 여성의 4배  
 <서울신문>. URL: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8500195>  
 이정연 (2021. 5. 19). 성별 고정관념 강화하는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95795.html>  
 이종규 (2022. 4. 11). [유레카] 국제 성평등 지수, 제 논 물 대기.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8421.html>  
 이준웅 (2018. 2. 11). ‘콘텐츠’의 대체어를 찾아보자. <경향신문>.  
 URL: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802112112005>  
 이혜미(2022. 6. 3). 대체 왜 젠더 때문에 세상이 소란일까. <한국일보>.  
 UR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109180004640>  
 장현은 (2020. 11. 29). 제시카 베넷, ‘미투’ 이후의 젠더 보도를  
 책임지다. <스토리 오브 서울>. URL:  
<https://www.storyof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4>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2021). 미디어를 위한 젠더 균형 가이드.  
 URL: <https://media.nodong.org/bbs/view.html?idxno=123288>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보도자료 (2021. 3. 8). 성평등한 사회,  
 미디어가 앞장서겠습니다.  
 URL: <https://media.nodong.org/bbs/view.html?idxno=123288>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노보 (2019. 3. 4). 다시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길  
 을 묻다. URL: <https://blog.naver.com/mbcfreedom/221479639148>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2022). ‘2022 성평등 컨퍼런스’ -  
 미디어와 성평등, 젠더데스크가 불러온 변화들 자료집. URL:  
<http://www.jsic.or.kr/main/inner.php?sMenu=E7000&mode=view&no=26>  
 정민경 (2022. 5. 3). 뉴미디어 ‘닷페이스’의 마지막 인사 “무모했고  
 즐거웠다”. <미디어오늘>. URL: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797>  
 정은주 (2022. 5. 16). [창간 34주년] 신뢰의 저널리즘, 멈추지 않고 한발  
 더.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42950.html>  
 진주원 (2018. 12. 13). 성폭력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  
 여성폭력방지법. <여성신문>. URL: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175>  
 진혜민 (2021. 3. 10). 블룸버그가 여성 전문가 2300명 DB 만든 까닭은?  
 “뉴스 경쟁력” . <여성신문>. URL: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90>  
 천관율 (2019. 4. 15).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인>. URL: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44>  
 최미량 (2017. 12. 10). ‘성평등’ 은 왜 ‘양성평등’ 이  
 됐을까...’이데올로기의 최전선’ 된 젠더-성소수자 문제. <경향신문>.  
 URL: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712201710001>  
 최승영 (2022. 3. 24). 국민 10명 중 8명 “용어 ‘이대남’ , 세대 · 성별  
 갈라치기 프레임” . <한국기자협회보>. URL: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1240>  
 한소희 (2022. 10. 17). 선고 앞두고 피해자 텔레그램 공개… “2차  
 피해” . <SBS>. UR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35770](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35770)  
 한지은 (2020. 7. 31). ‘추적단 불꽃’ 선택 받은 KBS, 젠더테스크  
 설치한 한겨레. <오마이뉴스>.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279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2798)  
 Deena Drewis (2017. 10. 10). Meet The New York Times’s First  
 Gender Editor. <Girlboss>. URL:  
<https://girlboss.com/blogs/read/jessica-bennett-new-york-times-gender-editor#:~:text=Jessica%20Bennett%20has%20been%20named,at%20The%20New%20York%20Times.>  
 The New York Times (2017. 12. 13). Jessica Bennett, Our New Gender  
 Editor, Answers Your Questions. URL:  
<https://www.nytimes.com/2017/12/13/reader-center/jessica-bennett-our-new-gender-editor-answers-your-questions.html>

## Abstract

# Conceptualization and Practice of Gender Equality Reporting

-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journalists -

Ran RYU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mmences with an acknowledgement of the problem that the news reports on gender equality issu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in full swing since the Me Too movement are causing confusion among the reporters in the field, because of the fact that while it has become a familiar concept, precisely what it means by reporting these issues is still not being understood or shared properly. The lack of in-depth approach to the concept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find



the methodology of practice continues to lead to errors in communication.

In the meantime,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many stories that have been narrated in the name of objectivity in the reports on gender issues are the ones that do not take the position and experiences of women into consideration, a trend to make changes about this has emerged among some female journalists.

This study revealed the reality and challenges of gender equality reporting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these reporters, who are regarded as 'pioneers' in reporting gender equality issues in Korea. The reporters who focus on gender issues recognize that women are the subjects of the reports on gender equality issues, and they regard this practice of reporting as a way of preserving the rights of the minorities and the weak. Even after the Me Too movement, to many reporters, reports on sexual violence are still considered a controversial field in the realm of journalism where reporters strive to achieve gender equality.

Also, reports on gender equality issues have ordinarily been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that is put forward by the philosophy of objectivism in its formal sense; while the customary practice in the newsroom, where objectivism is interpreted to mean impartiality whereby it would not take any sides, has created suspicions about the lack of expertise of the workforce whom are in charge of reporting gender issues. Amid the visible conflict between formal objectivism and the ethics of feminist journalism to be wary of it, some reporters were also observed looking for alternatives to formal objectivism on their own.

The reporters who focus on gender issues are also facing challenges in regards to the structural forms of the anti-feminism sentiment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The reporters who, with a sense of duty, are respectively making efforts to conduct a fair report on gender equality issues are easy to be exposed to violent situations such as online attacks by the public. At the same time, they feel that their reports are not welcomed by academia as well as feminists.

Through the system of the Gender Desk, which is established and managed by some news organizations, the discussion has begun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is system, including how a career of an individual reporter can be integrated with the Gender Desk initiative, and so on. While there is a principle which is that it is necessary to secure more female appointments to positions of leadership, a specific discussion has also begun about how achieving such goal shall lead to enrich the diversity in how news is reported and to encourage the practice of journalism that promotes gender equality.

Since gender equality is a value-oriented concept and also has served a declaratory purpose as a slogan, in order to turn this concept into a specific goal for which action can be taken, it is necessary that considerable discussions will have to be accompanied. In addition, since this goal is required to be accomplished in the field of journalism through the actual practice of collecting information and writing articles, it is also necessary to continue a professional discussion where much more diverse dimensions of things and circumstances are being reflected.

**Keywords :**

reports on gender equality issues, customary practice of the philosophy of objectivism, gender, feminism, media, gender desk

**Student Number : 2021-27757**